




여성평화아카데미

(월례평화마당)

| 일시_ 2007년 2월 ~ 10월 (월 1 회)

| 장소_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장

| 주최_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_  **통일교육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UNIFICATION EDUCATION



여성평화아카데미

(월례평화마당)

○ 일 정 : 2007년 2월 ~ 10월 (월 1 회)

○ 장 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장

○ 주 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 원 :  **중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위원회, 교육연구개발지원사업, 교육정책개발사업, 교육정책개발사업

여성평화아카데미(월례평화마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목 차

1. 인사말 -----	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영희, 김엘리	
2. 2007년 여성평화아카데미(월례평화마당)일정 -----	6
3. 2.13합의이후 정세전망과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모색 -----	7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4. 한국군의 파병 결정, 추진, 평가 체계의 문제점 -----	12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 내 몸을 평화롭게 하는 차와 음식 -----	45
문명녀 (평화전문강사)	
6. 영화보기를 통한 북한여성의 이해 -----	51
이명자 (북한영화 전문가, 전 동국대 연극영화과 강사)	
7. 2007 남북정상회담 보고행사 및 향후 여성의 과제 모색 -----	63
정현백 (평화여성회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8. DMZ 평화기행 -----	69
최양현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별첨	
회원가입서 -----	102



자료집을 내며...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의 눈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갈등과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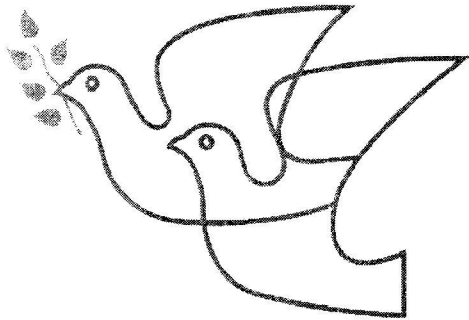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월례평화마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평화적인 상황의 문제를 짚어보고, 여성들이 평화만들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사적인 평화·통일 이슈를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시사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여성적 관점에서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진행한 월례평화마당 내용과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13합의와 2007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정세 변화, 북한여성과의 만남과 남북여성교류, 협력사업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군 파병문제,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평화적 사유와 자세에서부터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여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DMZ방문을 통해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평화를 말하고, 상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다 기쁜 것은, 평화여성회가 구상하는 여성6자회담네트워크 구성 (남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이 올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비전을 논의한 각국 방문 보고를 월례평화마당에서 가지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월례평화마당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문제를 생각해보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월례평화마당에서 이루어진 내용과 경험이 여성평화운동의 실천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처럼 2007년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을 보다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여성평화아카데미(월례평화마당)를 지원해주신 통일교육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영희, 김엘리



2007년 여성평화아카데미 (월레평화마당) 일정

회차	일자	시간	주 제	강 사
1차	2/27(목)	18:00~21:00	2.13합의이후 정세전망과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모색	정경란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집행위원장)
2차	3/29(목)	18:00~21:00	한국군의 파병 결정, 추진, 평가 체계의 문제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차	4/27(금)	18:00~21:00	영화관람 <우리학교>	진행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4차	5/31(목)	18:30~21:00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내 몸을 평화롭게 하는 차와 음식	문명녀 (평화전문강사)
5차	6/29(금)	18:30~21:00	갈등/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조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6차	8/31(금)	18:30~21:00	2008 여성6자회담을 준비하는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이야기 - 和平 [héping], 平和, Peace, Мир (미르), 평화 그리고 평화 -	정경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7차	9/11(화)	18:00~21:00	북한영화를 통해 북한여성 이해하기	이명자(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강사)
8차	10/8(월)	19:00~21:00	2007 남북정상회담 보고행사 및 향후 여성의 과제 모색	정현백(평화여성회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9차	10/12(금)	10:00~18:00	가을에 떠나는 DMZ평화기행	최양현진 (평화기행전문강사)

213합의이후 정세전망과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모색

일시 : 2007년 2월27일(화) 오후6시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이하 2.13합의) 배경

1) 미국

이라크 전 이후 중동사태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도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패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압박-미국의 비확산전략 도전, NPT체제 위협
(이란의 핵개발)

2) 북한

핵실험으로 자위적 억제력의 강화
유엔의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계속되는 금융제재로 인한 불편함과 고립감

2. 2.13 합의의 의의

- 북핵문제에 대한 3단계 해법(핵폐쇄-불능화-폐기)에서 1단계의 상호조치 규정
-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대 전진

- 일괄타결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북미 핵 갈등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의 초기조치와 5개국의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
- 대북지원부담과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한 점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기반을 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2.13 합의내용

- 1)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상호 조율된 조치 취하기로 합의
- 2) 초기단계 조치를 동시에 행동
 - 2)-1 북한 영변핵시설, 폐쇄 봉인, IAEA 요원 복귀
 - 2)-2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 2)-3 북-미 양자대화,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
 - 2)-4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양자대화 개시
 - 2)-5 북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협력, 5만톤 60일 이내 개시

초기조치 60일 이내 이행

- 3) 실무그룹 설치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일북 관계 정상화/경제 및 에너지 협력/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모든 실무그룹 회의 30일 이내 개최

- 4)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제공

5) 초기조치 이행되는 대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 개최

6)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갖는다.

7) 6차 6자회담 2007년 3월 19일 개최합의

4. 합의의 한계

그 다음단계(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시한이 모호한 점,
북한 핵무기폐기에 관한 조치가 불명확한 점-고농축우라늄(HEU)문제 등
한반도평화체제의 별도 포럼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5. 향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

BDA문제-합법/불법 계좌 구분시 불법계좌의 처리문제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및 신고(불능화단계) 과정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와 신고과정에서 HEU 및 과거핵 문제처리 방식
초기조치 이행 이후 6자장관급 회담의 성과

6차 6자회담에서 불능화 단계에서 핵폐기 단계에 대한 상호조치 합의 여부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 등 군사문제

6. 여성의 활동과제

화해자와 평화형성자로서 여성의 역할

1) 평화, 통일분야에서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 관점 강화 촉구

통일, 평화분야에서 성주류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통일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통일관련 독자적인 담당자를 신설하고 통일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며, 통일부에서는 여

성관련 독자파트를 구성해야 한다. 평화분야에서 평화협상과 분쟁해결을 위한 여성 역할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져야 하며 국방부를 사업시행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서 여성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아내며 여성지도력이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2) 남북여성교류활성화

6.15 공동선언 실천 여성본부 강화

남북여성교류의 민관협력기구 구성

3) 평화, 통일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 통일, 평화 분야 관리직 여성공무원 20%, 정부 위원회 50%로 확대
- 협상과정에서 여성대표 참여 의무화
- 6자회담과 남북당국간 협상, 향후 구성될 한반도평화체제 별도포럼에 여성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4)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성평화단체의 민관협 의체를 구성.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무력 및 기타 분쟁 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쟁, 안보, 군사영역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의 주류화를 요구

5) 남북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 남북여성교류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남북관계법령의 재정비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

6)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여성적 로드맵 구성

- 여성이 바라는 한반도평화체제 발표-평화협정
- 남북상호군축 논의 활성화-남북 상호 병력 감축 및 군사비 감축 구제안 제시
- 주한미군문제 입장 정립

7) 동북아평화를 위한 여성적 구상

- 여성6자회담 추진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구상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성국제연대

8)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NGO 활동 강화

- 갈등해결 및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여성단체 대표 참가, 평화협상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각국의 평화이행 모범사례 발굴·홍보
- 성인지적 평화, 통일교육 강화

9) 남북여성의 공존과 관용 훈련 프로그램 강화

남북통일과정에서 남북, 남북여성 사이에 차이와 다름을 상호인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공존과 관용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갈등조정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남북간의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해결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남북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화, 공동체 형성, 책임있는 결정, 협력과 공동의 해결, 다름의 수용, 감정 표현, 의사소통, 조정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한국군의 파병 결정, 추진, 평가 체계의 문제점

일시 : 2007년 3월29일(목) 오후6시

강사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들어가며

- 한국은 1999년 동티모르에 PKO활동을 위한 전투부대를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파병의 규모와 빈도 면에서 점점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있음

- 지난해 정부는 이라크 파견 연장안, 아프간 파견 연장안, 레바논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티모르에 대한 경찰 파견 등을 국회 동의없이 추진한 바 있음. 더불어 300명 이내의 병력을 국회사전동의없이 유엔PKO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말 고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 바그람 기지 정문에 대한 폭탄공격 과정에서 희생되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래에서는 빈번해진 파병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의 파병목적 및 임무 설정 등을 통해 살펴보고, 레바논 파병, 동티모르 파병(경찰 파견) 등 새로운 파병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적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문제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려 함.

2. 최근 주요 파병의 목적 및 임무 분석

-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을 중심으로

1) 이라크 파병의 사례

○ 파견 목적의 정당성 논란과 평가 부재

-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파병’ 평가 없이 은근슬쩍 파견목적 변경
- ‘미국 요청 파병’을 ‘유엔 결의 준수’를 위한 파병으로 왜곡 표현
- 이라크 재건, 세계평화 안정기여? 이라크 상황, 세계평화 달성 평가 없어

- “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鞏固)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일명 1차파병동의안 2003. 3)

-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 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임. ‘03년 4월 2일 국회동의하에 국군부대(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를 파견한 바 있음.”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일명 2차-자이툰파병동의안 2003. 11)

- “평화 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안. 일명 자이툰연장 동의안 2004. 12)

-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군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 및감축동의안. 2006. 12.)

- 한국정부의 초기 이라크 파견 목적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였음. 동의안의 명칭도 '이라크 전쟁 파견'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행위를 지원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함구하였고 이후에도 초기의 이러한 파견 목적에 대해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과정에서 '테러행위 근절'이라는 목표를 아무런 평가없이 삭제하고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주장하였음. 정부는 전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이라크는 전쟁에 준하는 교전상황이었고 지금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당시 시민사회는 '신속한 평화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주지하듯이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이라크는 '테러'의 온상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에 유엔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04년 파견연장동의안에 'UN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삽입. '미국이 주도하는'이라는 표현의 삭제.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유엔결의에 기초한 것인양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결의안 1511호('03.10.16), 1546호('04.6.8)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의 존재를 현실

로서 인정한 것이지 '다국적군'이 유엔이 요청해서 구성된 군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정부는 유엔결의에 의해 정당화된 파병인 것처럼 자이툰 부대 파병의 의미를 왜곡.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일축

- 정부는 2006년 파병연장동의안에서는 아예 '유엔회원국으로서...파병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파병과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별다른 연과인 없음. 게다가 '파병효과'에서 말하는 효과가 '테러행위 근절(1차 파병목표)'인지,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2차 파병목표)하는 것인지 정부의 설명이 없음.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이라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임무이거나 불가능함이 확인된 임무라 할 것임

cf. 실용과 실리, 명분과 원칙의 혼선

- 한반도 전쟁 방지, 한미동맹 균열 방지 등 안보의 신비화
- 막연한 두려움 혹은 이기심 부추겨 정책 효과를 평가할 기준과 잣대 자체를 제거
- 미국 편중의 근시안으로 현실주의 내세운 비현실주의 초래

- 정부는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음. 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에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나 긴장고조행위에 협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이를 '평화를 위한 실용외교'라고 표현.

- '경제적 국익론도 강조. 이라크 파병 초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이라크 파병으로 상당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안정적인 원유수급, 이라크 재건지원 특수, 후세인 시절 돌려받지 못한 채권의 회수 등이 거론되었음.

- 한편, 이같은 실익은 좀체로 현실화되지 않았음. 미국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핵심국가정책인 '반확산' 정책을 후퇴시킬 생각이 없었음. 오히려 이른바 '실패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일변도의 대응이나 일방적 체제병형론은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는 것에 비례하여 제검토되게 됨. 또한 이라크 내 무장갈등이 심화되고 파병국가 국민에 대한 보복공격 가능성이 고조되게 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지게 됨.

- 한편, 파병 후 '북핵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 국익' 등 당장 손에 잡히는 반대급부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정부와 국회,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의 공고화야말로 '총체적 국익'이라고 파병의 불가피성을 주장. 또한 정부는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결국 경제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미 600여명을 파견한 한국이 3000명이나 되는 대병력을 '추가로' 파병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균열'과 '불이익'이 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거나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음

- 이같은 일련의 '안보의 신비화'는 약소국의 열패감을 부추기는 것이었고 상당한 효과를 보였으나 파병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 또한 편실주의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맹목성과 공포감 등을 동원함으로써 파병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잣대를 해체시켜 버리는 악영향

- 또한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사안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나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우는 예외주의 외교 행태를 드러내 한국외교의 담론적 국지성을 강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국회 동의 없는 임무 변경

- 국회 동의 없는 다이만 부대의 추가 파견
- 국회 동의 없는 유엔 시설 요원 경호

▪ 국회 동의 없는 지역재건팀 참여

- 당초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된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3,000명이내)”를 추가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구성되었음.

- 그런데 정부는 2004년 10월 다이만 부대로 알려진 공군수송부대를 이라크에 파견.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에 적시된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편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임.

- 이는 국회 동의를 전혀 거지치 않은 위헌적 파병임.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가 부재

- 더욱이 다이만 부대는 ‘일정책임지역’인 아르빌 외에도 바그다드, 알리, 알아사드, 키르쿠크, 알쿠트로 등으로의 비행임무도 맡고 있고 자이툰 부대 외에도 수송인력의 10% 가량을 미군과 UN인력을 수송했다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유엔지원단에 대한 경호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연장 동의안에 명시하지 않음. 한편, 한국정부는 2004년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음.

- 지난 2006년 10월 10일 이라크주둔 연합군측은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주둔한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 지역 민간 정부와 함께 ‘지역재건팀(RRT)’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음. 지난 2006년 7월 발표된 육군홍보자료에는 이미 지역재건팀(RRT)에 대한 소개와 국방부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임무와 구상이 육군 홍보자

료에 먼저 발표된 것임. 2006년 12월초에 작성된 국방위원회 보고서(이라크 파병연장안 검토보고서) 역시 “아르빌의 지방재건팀(RRT)에 참여하는 한국인 경호를 자이툰부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RRT에 참여하는 미국인과 함께 이라크 반군세력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정부의 파병동의안에 적시되거나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 수행 임무의 적정성 평가 부재

- 주둔비의 1/10에 불과한 재건 비용
- 재건지원 임무 수행 내역의 제한적 공개
- 불투명한 재원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부분은 부대유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음. 이로 인해 ‘주둔을 위한 주둔’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또한 재건지원 예산의 1/2이 치안유지 지원활동에 쓰이고 있어, 사실상 재건지원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학교 신축, 상수도 지원, 차량지원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지원 사업의 재원이 불투명함.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재건지원 내역에는 KOICA자금에 의한 지원, CERP자금에 의한 지원, 자이툰 예산에 의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2005년-6년 이른바 ‘미 작전통제국 지휘관 긴급자금’(Commander Emergency Response Program) 4048만 달러를 미군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전체 재건지원 예산 사용내역과 맞먹는 큰 액수임

- 아래 표는 자이툰 부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재건지원사업들의 예산이 자이툰 부대 예산이 아닌 미군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자이툰 부대 '06년 사업(53개 사업 26억원) - 국방위원회 2006

구 분	예산(백만원)	착수시기	완료시기	비 고
학교 신축(26)	1,360	'06. 2월	'07. 7월	CERP 예산 (軍 예산 9개소)
보건소 신축(1)	286	'06. 9월	'07. 4월	CERP 예산
급수시설(3)	287	'06. 8월	'07. 3월	
송전선로(16)	168	'06. 5월	'07. 4월	
관개수로(6)	178	'06. 5월	'07. 2월	
도서관 건립(1)	360	'06. 9월	'07. 4월	軍 예산

- 2005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재건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6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 '부대활동지원' 항목 중 민사지원예산으로 최초로 99억이 책정됨. 그런데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보고서에는 2004년 171억, 2005년 150억이 각각 책정 집행된 것으로 사실상 허위 보고됨.

- 국방부가 2006년 국감자료에서 밝힌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사업 중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지급된 물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재건지원의 대부분이 '파라스텐(KRG 정보국으로도 표기됨), 아사이쉬(쿠르드 경찰 정보기구)'으로 일컬어지는 정보국으로 제공되었음. 이 중 아사이쉬는 쿠르드경찰내 정보기구로서 6월 키르쿠크에서의 '소수종족과 투르크멘족 600여명을 납치, 구금'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워싱턴 포스트, 2005. 6)

- 만약 자이툰 부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쿠르드 정보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 제공했다면 '쿠르드 정보국의 위법적인 납치·구금활동을 방조·지원'하고 '이라크내 종파간·인종간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 전체적으로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실적의 보고별 수치상의 차이나 혼란만큼이나 자금 사용내역이 매우 불투명함. 이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필요함. 또한 시민단체에 제시한 통계, 의원실별로 제시한 통계, 언론에 공개된 통계 간지원내역에 불일치가 심각함.

2) 아프간 파병의 사례

○ 파병근거의 정당성 논란

- 미국 요청에 의한 파병, 유엔 내세운 사후 정당화
- 다른 유엔 규범과의 상충엔 침묵

- “유엔 회원국으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중 ‘파견 목적’ 부분 2001. 11)

-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아프간에 파견된 국군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중 ‘파견 목적’ 부분 2004. 11)

-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UN안보리 결의안 1368호('01.9.12), 1373호('01.9.28)에 근거하여 대테러 전쟁 파견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아프간 탈리반에 대한 미국과 다국적군의 전쟁선포를 ‘대테러전쟁’으로 정당화한 적 없음.

- 다만, 결의 1368호는 3항에서 모든 국가에게 테러 행위자 및 비호자의 사법적 처벌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5항에서 안보리가 9·11 테러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상당히 포괄적 대응의 여지를 열어 놓았음.

- 그러나, 미국이 아프간 탈리반 공격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중대한 국제법적 논란거리임.

-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 없이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대테러전쟁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동참해옴.

- 정부는 아프간 최초 파견 당시 유엔결의안을 인용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표현했다가 파병 연장 과정에서 “아프간에서 인도적 차원의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UN안보리 결의안 준수”하고자 한다고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음.

○ 파병 지역 및 수행 임무의 문제점과 평가 부재

- 파병 임무 지역 내 국제법 위반 행위에 침묵
- 파병 지역 내 국제법 위반 행위에 침묵

- 한국의 공병 부대와 의료 부대는 미국의 바그람 기지 내에 활동하고 있는 바, 한국군은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라 미군과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 건축 수리,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예컨대 국군동의부대의 아프간 파견을 다룬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2001)의 ‘파견 임무는 “ 국군부대의 임무는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요원 및 부대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병력·장비·물자 수송을 지원하며, 필요시 난민구호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 통역병으로 현지 파견된 경력이 있는 일부 제대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

임무인 다국적군 진료 임무, 다국적군 시설 건설 임무 등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진료의 경우는 아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요컨대 아프간 파견 국군부대는 해당 지역에 절실히 주둔해야 할 임무가 사실상 없거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외의 인도지원등을 내세워 정치적 존재로 현지에 장기주둔하고 있는 것임

- 국방부는 보고를 통해 동의부대가 22만명 이상의 현지인을 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진료의 구체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함.

-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동의부대의 예산내역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cf. 다산동의부대의 '부대 운영/유지 비용'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동의부대	다산부대	계
계	2,623	5,821	8,444
인 건 비	1,117	2,349	3,466
급 식	357	907	1,264
피 복	50	128	178
기타 부대비	1,099	2,437	3,536

출처 : 2006년 국회검토보고서

- 바그람 기지는 미국이 '탈리반 관련자'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아프간 거주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고문수사와 국제법 적용을 배제한 비인도적 장기 구금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기지임.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인도적, 국제법적 해석이나 지적을 한 바 없음.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 파병연장반대의 논리 2005. 11. 해당 부분 참조)

- 바그람 기지에 있는 불법 수용시설 건설에 공병부대가 참여했는지 여부, 바그람 기지에서 있었던 수감자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고문행위(미 육군 조사팀은 2005년 이에 대해 2천여쪽의 보고서를 낸 바 있음)를 우리 의료부대가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cf. 아프간 바그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와 살해

- 보통 80명-500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 수용시설은 아프간이나 기타 지역에서 붙잡힌 알카에다와 탈레반 용의자들을 심문해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미군이 운영.

- 아프간의 미 공군기지에 속한 이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심각한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최소한 수감자들 두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 육군 조사팀이 작성한 2천여쪽의 보고서를 입수해 2005년 5월 20일 보도

- 미군의 조사에서 미군 병사들이나 통역관들은 조사관들이 수감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목을 밟거나 성기를 발로 차거나, 수갑을 찬 채 앞뒤로 구르면서 조사관들의 군화에 입을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고 증언. 배설물과 물이 뒤섞인 통에서 병마개를 줍도록 하는 학대 행위도 확인.

- 또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반항적이라고 분류된 수감자들을 오랫동안 사슬로 천장이나 문에 묶어 놓는 등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와 구타가 일상적. 아프간에서 붙잡힌 테러용의자중 770명은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된 상태. (뉴욕 타임즈, 2006. 9. 17)

<딜라와르 고문치사 사건>

- 2002년, 22살의 택시운전사인 딜라와르는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조사받던 중 4일 동안 팔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독방 천장에 매달려 미군 조사관들에게 구타당한 결과 사망.

- 군 조사팀의 조사 결과 당시 조사관들은 딜라와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범인은 2004년 붙잡힘. 딜라와르가 숨지기 몇새전에는 이곳에서 하비불라라는 젊은이가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음.

- 2004년 10월 육군조사팀은 딜라와르의 죽음에 27명의 장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률적 처벌은 계속 미뤄지고 있음. 지금까지 7명만이 기소됐고 군 검시관이 타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2005년 5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음.[한겨레 2005. 05. 20]

<관타나모의 코란모독에 대한 FBI비밀보고서>

- 2005년 5월 9일 뉴스위크는 관타나모 수용소 내에서 코란 모독 및 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하여 아프간과 이라크 등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프간에서만 16명이 사망.

- 상황 전개에 놀란 미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뉴스위크 측 역시 제보자의 태도 변화 등을 이유로 '오보'였다는 정정기사를 발표. 그러나 5월 21일 ICRC(국제적십자위)가 2002년-2003년 초 관타나모에서 이루어진 코란 모독 사례들에 대해 국방부에 이미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5월 25일 ACLU(미국시민자유연맹)등 인권단체들이 코란 모독 증언을 담은 FBI비밀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서자 결국 정부는 '경미한 부주의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

○ 아프간 지역 안정성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왜곡평가

- 아프간에서의 성공적인 인도지원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다지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 인도 지원단체의 전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한국인 테러위협 끊이지 않는 아프간>

- 자살 폭탄테러로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 사망한 아프가니스탄은 근년들어 한국인의 테러 피해가 계속 우려됐던 곳. 비록 이번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지 교민 200여명과 다산.동의부대 소속 한국 병사 200여명의 안전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 일로 평가됨.

- 탈레반 등에 의한 아프간 내 한국인 테러 피해 가능성은 지난 해 여름 기독교 계열 비정부단체인 아시아협력기구(IACD)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한국인 수천명이 참여하는 ‘아프간 평화축제’를 기획하면서 집중적으로 부각. 과격 이슬람 단체 등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 행사 계획을 철회시키려는 한국 정부와 IACD측이 수개월간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IACD측이 지난 해 8월 행사 개최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별탈 없이 마무리됨. 또 지난 해 7월 말 카불 인근 수로비 지역에서 주머니에 수류탄과 사제 폭발물이 장착돼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의 조끼가 발견돼 한국인 테러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일도 있었다. (연합뉴스 2007-02-28)

3. 이라크 -아프간 파병 결정 과정과 체계의 문제점

○ ‘평화주의 헌법’의 규범적 효력 상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바름.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가 이라크 파견 동의안에는 파병의 근거법령으로 헌법 제 5조 1항이 명시되어 있음.

- 정부의 주장은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했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의 1차 파병안(2003년 3월 제출)의 정식명칭은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으로 이 동의안은 한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임.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2004.3.10. 청와대 이라크 지원 방침)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파병동의안에서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며 참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연장동의안(2004. 12)에서 서히제마부대를 자이툰 부대에 포함시켜 이를 ‘일건화一件化’한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한국군은 2003년 5월 파견 이래 침략전쟁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임. 현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과 피할 길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 유엔결의·국제사회 규범의 선택적 자의적 인용

- 한국정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등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인양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유엔가입국의 의무’, ‘유엔 결의 준수’ 등의 명분을 사후적으로 차용해 옴.

- 정작 대테러전쟁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 특히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 아프간 전쟁의 국제법적 논란과 유엔내부에서의 논의 등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음

- 정부는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모두 유엔결의에 의해 정당화된 것처럼

럼 주장하고 공식문서에 표기했으나 이것이야말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임.

○ 전쟁의 윤리성 및 국제법적 타당성에 대한 합구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숭한 질문에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의 근거나 명분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음.

- 미국 상원 정보위보고서나 듀얼퍼보고서, 영국의 버틀러 보고서나 다우닝 메모에 대해서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와 관타나모와 바그람(아프간) 기지에서의 불법구금과 고문, 팔루자와 라마디, 하디타, 이사키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도 합구했음.

○ 일방적 정책 결정과 토론 배제

- 정부는 아프간 파병 및 1차 2차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 충분한 토론의 시간적 여유와 여론수렴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음. 정부는 항상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언제나 정부가 미국에 파병방침을 통고한 이후에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음.

- APEC 정상회담을 앞 둔 2004년 10월 17일,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면담하고 국민적 합의 전에 미국에게 파병여부를 먼저 통보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고 10월 18일 NSC회의는 단지 첫 구체적인 논의자리”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표단들이 청와대를 떠난 직후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각당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추가파병방침을 통보했음.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자료집, 「이라크파병반대의

논리」 2003. 10.)

- 2006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파병연장안 역시 지난 9월 미국에 먼저 파병연장방침을 통보한 후 국회에 제출된 것임

- 정부와 국회는 공청회 등 필수적인 여론수렴 없이 "파병이 국익에 합치된다"고 결론 내렸음. 정부는 아프간, 이라크 1차, 2차 파병 및 그 연장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음

-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도무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하지 않는다는 점. 2004년 2월의 추가파병 의결을 포함한 2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찬성 발언 없이 반대발언만 청취한 후 표결에 임했고 각각 정원 273명 중 찬성 155 : 반대 50(16대 국회, 2004. 2월), 정원 299명 중 찬성 161 : 반대 63: 기권 54 (17대국회, 2004.12.31)의 압도적인 숫자로 파병을 승인했음.

- 2005년 파병연장안 처리 본회의에서는 2명의 여당원이 찬성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철군일정을 밝히려는 반전평화운동측의 비판을 의식한 듯, 1000명의 감군이 사실상 철군의 시작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연장안 처리를 요청(조성태)하거나, 2006년 6월 이후 철군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김성곤)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이들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음.

○ 정보 차단과 은폐, 조사 없는 정책 결정

- 정부는 1차 파병, 추가 파병, 파병연장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이라크 상황은 곧 안정화될 것, 이라크인은 한국군을 반길 것"이라고 보고했음. 재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의도였음. 이들 보고의 상당수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었음.

- 추가 파병 예정지였던 모술에 대해 정부 조사단은 안전하다고 말했으나 이는 곧 사실이 아닐 뿐더러 최소한의 현지조사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음.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협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 하였으나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 였다고 폭로함.

- 2004년 2월 키르쿠크를 방문한 정부 조사단과 국회조사단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음. 이들은 키르쿠크가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보고하였 으나, 당시 키르쿠크는 저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하나였고 종종갈등도 심 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었음. 세계적인 유전지대인 이 지역은 그 후 연 방제를 규정한 이라크 헌법 논의과정에서 자치경계 설정을 둘러싼 가장 예 민한 갈등의 진앙지로 부상하였음.

-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이후 이라크 정치상황의 변화, 안정화 수준, 자 이툰 부대 재건지원 실적 및 사건사고, 다국적군의 철군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라크 상황과 각 나라 파병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는 파병반 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만 내놓고 있는 실정. 국회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 는 시민사회운동과 일부 의원들의 청문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실용주의·예외주의의 채택, 보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각

-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파병, 한미동맹을 위한 파병 등의 논리는 정부

가 주로 내세우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는 상충되는 예외주의적 담론.

- 한국이 이같은 예외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미국의 현실적인 힘 때문인 것으로만 설명하기 힘들. 한국 외교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으로서 외교역량의 미발달과 후진성, 막연한 대세추종 경향의 결과. 한국같은 중간적 힘을 가진 나라에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외교적 역량에 의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 할 때 이같은 낙후성은 치명적인 것.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사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과정이자 한국 정부와 국회가 표방한 현실주의가 현실 적합성을 잃어가는 과정. 이라크 전쟁 이후 4년여의 과정은 힘에 대한 고정관념, 현실 혹은 실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꾸어 놓고 있음. 한국정부는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의식하여 국제관계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근시안적 추종을 선택.

- 이라크 아프간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 힘에 의존해야 할 순간에 실용주의, 예외주의를 내세워 국민들의 합리적 토론을 봉쇄

- 그 결과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이라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저당 잡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음. 이라크 반전운동을 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고조되고 있으나 21세기 초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역동적 참여민주주의는 그 최대 수혜자인 노무현 정부에 의해 크게 위축됨.

- 주목할만한 것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계기로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비민주적 패턴이 확인해졌다는 점임. 이후 주한미군재배치 협상이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노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

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음.

○ 파병 정책 결정의 검증가능한 정책적 평가기준과 절차의 해체

- 유엔 결의, 헌법 등이 미국이 요청한 파병에 자의적으로 동원됨에 따라 한국군의 해외 파견에 선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또한 진행된 파병군의 임무수행 결과와 해당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엄밀한 보고와 분석평가가 없이 성공적 임무수행만을 강변하다보니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파병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있음

4. 레바논 파병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 유엔의 요청도 없이 유엔의 이름을 앞세워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을 지속해왔던 한국정부에게 레바논 유엔평화감정군(UNIFIL) 파견 요청은 한국이 푸른 유엔의 모자를 쓰고 실질적인 평화유지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적합한 기회로 인식되는 듯함

- 레바논 휴전을 다룬 유엔결의안 1701호 채택 전후 한국정부로부터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식 비공식 언급이 흘러나오기 시작. 반기문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당선은 한국의 국제기여, 특히 PKO를 통한 기여의 확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일조.

- 결국 한국정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1년 연장 동의안과 더불어 레바논에 350여명 규모의 특전사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하는 동의안을 심의·의결. 동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그러나 정부의 레바논 파병 추진은 유엔평화유지군 논의라는 점에서 이라크 혹은 아프간 파병논의와는 궤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동일한 오류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

1) '정책' 없는 파병' 혹은 '친이스라엘적 정책에 지배되는 파병'

○ 정부 레바논-팔레스타인 정책의 편향 혹은 부재

▪ 레바논 교전의 한 당사자인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

- 한국정부는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레바논-이스라엘간 무장갈등의 원인이 뭔지,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더불어 정부는 바람직한 레바논-이스라엘 갈등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국민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 한마디로 정책 없이 군대가 먼저 가는 형국.

- 정부의 정책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레바논에서 무장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의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중재하기에 합당한 조건과 자격, 정책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헤즈볼라를 '반미 테러단체'로 규정해왔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각종 테러단체동향 보고서 목록에 헤즈볼라를 기재하는 것을 계속해 오고 있음. 이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을 레바논 남부의 불법 점령에서 몰아낸 '저항세력'이자 현 정부에 각료를 배출한 '정치정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도 심각한 차이가 있음. 이같은 인식을 가지고 레바논 남부에서의 무장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며 예방하는 작업이 가능한 지 의문.

- 이번 레바논 파병의 발단이 된 '이스라엘-헤즈볼라,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에 대한 외통부의 인식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 외교통상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한창이던 2006년 7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반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데 대해서는 '유감'만을 표명하는데 그침. 사실, 하마스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 행위 전날, 이스라엘 병사들은 팔레스타인 의사 등 민간인 2명을 납치했었음. 헤즈볼라의 수감자 교환 시도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비밀구금시설인 '1391 수용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가 레바논 영토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음.

- 한국정부는 2005년 5월 이후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교섭대표부를 설치. 예전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5년 5월 최초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방문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첫 면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압바스 수반은 분리장벽 문제를 강력히 성토했으나 반 장관은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레바논 문제해결을 위한 유엔 논의에 소극적이던 한국정부, 파병만 적극적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는 레바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데 동참하지 않았음. 2006년 8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여부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 이사회 47개 나라 중 과반이 넘는 27개국 이 찬성표를 던졌고 11개 나라는 반대. 2006년 신설된 인권이사회의 신입이사국인 한국은 다른 7개 국가와 함께 기권표를 던졌음. 조사위원회는 그 후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

- 한국정부는 또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사용한 집속폭탄이나 인 성분이 함유된 화학무기, 최근 밝혀진 공습지역의 방사능 피폭 문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매설한 다량의 대인지뢰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다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아 왔음.

- 한국 외교통상부는 2003년 12월 8일 10차 유엔임시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의결하는 표결에서 기권. 이 결의안은 당시 찬성 90대 반대 8표로 통과. 레바논 남부의 문제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통과 저항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 부재는 레바논 정책의 부재의 다른 표현이기도 함.

- 정부는 오로지 1701호 표결에만 찬성 표결. 이후 정부는 레바논 파병의 근거로 유엔결의안 1701호를 금과옥조처럼 제시. 그러나 1701호 결의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없고, 1701호 결의 외 레바논-이스라엘 관련 다수의 결의안에 대해 적절하게 소개하지 않는 등 레바논 관련 유엔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취사하고 발췌해 적용

- 1701호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미국과 영국은 이른바 '지속가능한 휴전'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 심지어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부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새로운 중동을 위한 산고'라며 두둔. 무수한 민간인인 희생된 뒤 레바논 침공 한달만에 겨우 합의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이 이후 미국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을 정도로 친이스라엘적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결의안으로 귀결.

- 1701호 결의안은 헤즈볼라에게는 모든 공격행위(attacks) 중단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offensive) 군사행동 중단만 요구.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defensive) 작전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셈.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기보급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최근 까지도 레바논 영공과 영해를 드나들며 위협적인 군사시위를 반복하고 있음.

- 1701호 결의안이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리타니강과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이스라엘에게 수개월간의 추가적인 군사작전 시간을 허용. 이스라엘로서는 이 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과 레바논군이 진주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명분을 얻게 된 셈.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12월 4일까지 이번 침공의 점령지 중 하나인 가자르에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음.

- 무엇보다도 결의안 1701은 1967년 이래 지속되어온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이에 대한 술한 대이스라엘 유엔결의의 이행, 특히 불법점령지역인 '세바팜스' 반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채, 헤즈볼라 등 레바논 내부 무장집단의 무장해제만을 언급. 1967년 유엔안보리는 세바팜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242호, 338호를 채택한 바 있음. 유엔결의안 1701호가 미국과 서방의 시각에 편중되었다고 비판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2) 조사없는 파병, 불가능한 임무

○ 조사 절차의 하자, 조사 결과의 하자

- 지난 12월 4일 레바논 파병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위 심의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자신의 '해외파병업무 추진절차'조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

짐. '추진절차'에는 "실무 시찰단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보내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는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3박 4일간 단 한 차례만 시찰단을 파견한 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

- 이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가 확보할 수 있었던 실질 조사기간은 아마도 1박2일을 넘지 않았을 터임.

- 절차적 하자 외에 조사결론도 도무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 시찰단은 자신의 조사결과를 파병동의안에 다음과 같은 단 한 줄로 요약해 놓고 있음. "작전환경 및 활동, 전투근무 지원면에서 파병시 문제점 별무 판단!"

-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PLO의 이스라엘 공격행위를 빌미로 레바논을 침공한 1978년 3월 결의안 425호를 채택, 현재의 유엔잠정군을 파견하였으나 유엔군은 아무런 중재 혹은 평화유지기능도 수행하지 못해왔음. 사실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유엔군은 속수무책이었음. 한국군이 레바논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한다는 유엔잠정군은 지난 28년간 레바논 평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형식상의 평화유지군'인 셈임. 레바논 약 30년간 맡겨진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유엔군 증원 요청에 응하면서 '작전환경에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단언하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외통부 당국자의 부연설명은 점입가경임. "주요 갈등 상황은 수도인 베이루트 주변에서 이뤄지고 남부는 안전하다"는 것. 불발 집속탄 100만발이 산재해 있고, 육해공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입체적인 군사행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 남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외교통상부는 이후 현지조사보고서 공개요청에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불가능한 임무

- 1701호 결의안은 헤즈볼라 등 레바논 무장세력의 정규군 편입과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임.

- 결코 '친헤즈볼라적'이라 할 수 없는 레바논 내각조차 유엔안보리 결의 1559호, 1701호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반대하고 있음. 특히 지난 7·8월 이스라엘 침공 이후 헤즈볼라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음.

- 이스라엘의 공습과 침공을 막는데 레바논 정부군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대적해 패퇴하지 않은 유일한 무장집단이라는 점, 레바논에서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점 때문에 이스라엘에 침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지지도는 단기간에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

- 이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시도한다는 유엔평화잠정군의 임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현단계에서 올바른 우선순위인지도 의문.

3) 중동 내부의 세력재편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 레바논 문제의 복잡성과 이라크 내전과의 연계가능성

- 휴전 후 헤즈볼라는 허약한 정부의 개혁, 시아파 무슬림의 내각 지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를 조직. 반면 헤즈볼라의 집권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우려, 그리고 레바논 내 반헤즈볼라 소수정파의 위기감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 특히 미국 등 친이스라엘 진영이 레바논의 내정에 무력으로 간섭하거나 레바논 내 정치변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할 경우 레바논은 이라크와 더

불어 중동 전체로 확대될 거대한 무장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음.

- 이스라엘이 세바팜스 등의 점령지를 반환하고 수감자 석방에 응하며, 미국이 이란과 시리아와의 협력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레바논 내외에서의 정치 군사적 갈등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함.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협력적 접근은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SGRK 제안한 방안이기도 함. 아마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레바논에서 그럴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시나리오라 할 것임.

- 그러나 헤즈볼라를 친이란 혹은 친시리아 정당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테러단체 쫓으로 쫓아내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소위 '시아벨트'를 '중동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주의적 시각, 이에 반발하여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어져야할 국가로 보는 극단주의적 저항의 시각이 군사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은 매우 높음. ISG의 제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 반응에서 보듯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함.

- 한국 정부는 특히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친미-친이스라엘 지역인 쿠르드 지역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로서 소위 '시아벨트'를 민주주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추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특히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쿠르드에 각각 친미 친이스라엘 정부를 세워 시아벨트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두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한국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질 것임

- 세계 어느 나라도 이라크 문제와 이란문제, 레바논 문제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중동 전체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함. 이러한 합의 없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임.

○ 레바논 파병 중단하고 중동 평화에 대한 외교정책 합의 선행해야

-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정부가 이러한 레바논의 역사와 정치군사적 환경, 그리고 다양한 유엔결의에 대한 균형적 판단 없이, 나아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세력재편에 대한 판단없이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임.

- 정부와 국회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친이스라엘 일변도의 외교활동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군대부터 파견하려고 조바심 칠 게 아니라, 먼저 국제사회와 이슬람세계에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기여를 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부터 제대로 가다듬어야 할 것임.

- 파병 논의에 앞서 레바논 문제 해결방안과 올바른 중동평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부터 차분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와 국회는 파병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답게,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답게 대외정책에서의 평화적 원칙과 민주적 기준부터 분명히 세워야 함. 이라크의 사례에서 체험했듯이 잘못된 파병은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는 커녕 무장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가의 위신과 가치를 실추시킬 뿐임.

5. PKO법 제정의 문제점

1) 'PKO법' 제정 추진의 문제점

○ 2개의 파병관련 입법안

-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의 동의절차 없이도 일정 규모의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지위임형 파병 법률 제정을 추진 중.

-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이 외교통상부의 요청을 받아 지난 2005년 9월 국회에 대표발의한 “국군부대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파견에관한법률안”(일명 PKO법)은“정부가 파견부대 규모 300명 이하에 한하여 국회에 통보한 후 파견할 수 있고, 국회가 5개월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심지어 이 법안은 “100명 이하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심지어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에도 '1개 연대'를 국회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체입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 송의원의 대체법안은 결국 2000명 내외의 전투병을 언제든지 국회동의 없이 내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법안은 아예 한국판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음.

○ 위헌성 : 국회 동의권의 배제

- 이들 법안은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자학적 법안임.

- PKO법안은 국회의 해외파병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2항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음.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파병과정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 5

조를 '재건지원' 파병이라는 수식어로 간단히 무력화시킨데 이어, 이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마저도 우회할 수 있는 변칙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임.

○ 기존 파병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재생산할 가능성

- 이들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자못 진지하게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적 기여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속내는 군사주의와 관료적 편의주의를 지향하고 있음.

- 이들 법안들은 군대의 해외 파견 상의 편의와 재량은 무한대로 확장해 놓은 반면, 국제사회에 평화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민주적 합의 절차와 평화주의적 선택기준의 정립에는 한 없이 소홀.

- 이는 이미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비밀주의, 군사적 편의주의, 파병군 임무의 자의적 변경과 변칙적 부대 파견, 파병명분의 자의적 적용 등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큼. 국회의 거수기화 역시 가속화할 우려.

-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파병의 편의는 결국 초강대국, 특히 미국의 요구에 의한 우리 군대의 동원의 편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cf. 동티모르 무장경찰 파견의 위헌성

- 정부는 2006년 11월 29일 동티모르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을 펼치기 위해 한국 경찰관 5명을 파견한다고 발표. 이들은 2007년 상반기쯤 파견이 예상되는 1개 중대급 경찰 병력 120~140명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사전 준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함.

- 파견 병력의 신분만 군인과 차이가 있을 뿐 무장경찰의 해외 파견은 군

파견과 동일. 이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군대의 해외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정부는 경찰이라는 이유로 국회동의를 생략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위헌임

- PKO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이러한 자의적 판단과 결정이 구조화될 우려가 큼

2)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비군사적 국제기여 방안 연구 필요

- PKO라 할 지라도 파병은 최후 차악의 수단

-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 더욱 강화해야

- 탈냉전 이후 유엔 PKO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역대 유엔사무총장들은 PKO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효한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

- Brahimi 리포트(2000년 아난 총장이 제출한 PKO 개혁안)는 중립성 원칙, 자위에 한정된 무력행사 등을 강조함과 아울러 평화 합의를 위배하거나 폭력으로 합의를 깨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교전 규정에 의해 “자신이나 다른 요원 및 임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파견부대의 평화강제 활동의 강화를 제안. 또한 군대 외에 시민경찰 적 활동이나 복합적 PKO의 중요성도 제안.

- 그러나 국제적으로 평화유지군(PKO) 파견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님. 예컨대 탈냉전 이후 대표적인 유엔 PKO활동인 소말리아나 코소보의 경우는 실패한 사례에 속함.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UNICOM ; 1991. 4~2002)처럼 인도적 참사를 낸 이라크에 대한 패권적 봉쇄에 들러리를 선 경우도 있음.

- 무장갈등 당사자들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시의적절한 협력이 잘 조화되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군대를 보내야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높음.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과제 후속 보고서'에서 "최근 PKO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성공 사례에서는 PKO의 3대 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이 잘 준수되었고, 성공적인 아닌 사례에서는 이들 중 한, 두개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 1995년 유엔 사무국의 평화유지활동국이 작성한 'UNOSOM으로부터의 교훈에 관한 종합 보고서' 역시 "현장 7장상의 활동(무력제재)과 6장상의 활동(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동시 수행 불가", "분쟁 당사자간 화해 의사가 없는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견 불가" 등의 교훈을 제기(고영대. 정부의 이른바 PKO 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 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2005. 5)

- 유엔군이라고 늘 정의로왔던 것도 아님. 오히려 지역사회에 민폐를 기치고 부패와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했음. 캄보디아, 소말리아, 코소보, 시에라리온, 콩고 등지의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밀수, 매춘과 인신매매, 강도와 강간 등의 범죄가 보고됨. 이는 법과 제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분쟁지역에서 유엔군이라는 치외법권적 지위와 무장력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군대의 파견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 중 하나임.

- 그래서 대다수 무장갈등예방 규범들은 PKO 활동의 중요성, 특히 PKO의 한계를 넘어설 보다 강화된 평화강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예방과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정의 확립이 우선이고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차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PKO 파병의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해외파병은 철저히 민주적인 과정에서 결정되고 그 진행과정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어야 함.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파병은 더욱 그러함

○ 평화국가다운 국제평화 기여 방안 연구 선행해야

- 우리 헌법은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군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어떤 헌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이 헌법은 존중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 지금까지 파병과정에서 만연했던 편의주의와 비밀주의, 국민과 파병지 주민에 대한 부실과 무책임은 민주적으로 극복되어야 함.

- 군대를 손쉽게 보내는 방안을 연구하기보다 무장갈등을 방지하는 평화적 수단의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쏟는다면 '대한민국'은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임.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내 몸을 평화롭게 하는 차와 음식

일시 : 2007년 5월31일(목) 오후 6:30

강의 : 문명녀(평화전문 강사)

茶 詩

청군분이 차를 보내주어 감사함

이규보

그리운 소식 몇 천리를 날아왔는고
흰 종이로 함을 바르고 붉은 실로 묶었구려
내 늘그막에 잠 많은 줄 알고서
환식 전의 새 차잎 구해 주었네

벼슬이 높아도 가난하기 더없는 나이기에
보통 먹을 것도 없는데 하물며 선차라

해마다 특별히 어진 이 주는 것 받으니
이제야 인간의 재상집 구실하누나

햇 차

정약용

금빛 휘장 (차싹의 단) 밖으로 솟은 대장깃발(차싹의 기) 높이 세우고
게눈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끓는 모습이 흐릿한 눈에 보이네
가난한 선비는 점심조차 먹기 어려운데
새로 떠온 맑은 샘물로 부질없이 우전차를 끓이네
신선들의 경지에선 백성 근심 묻지 마라
사객가에서 누구와 수액(차를 너무 많이 마심)을 나누리
가슴속엔 막히고 걸림이 없다고 자신했는데
맑은 차 마셔보니 상쾌하여 다시 자랑할만 하구나

밤에 앉아 차를 달임

정희량

밤은 얼마나 깊었나 하늘엔 눈이 오려 하고
맑은 등 밝힌 고속은 추워 잠이 오질 않네
상머리의 이끼를 말끔이 닦아내고
푸른 바다 같은 차가운 샘물을 쏟아 부어
화력의 강약을 고르게 다스리니
벽 위에 불빛이 어리며 김이 나는구나
끓는 소리 쉬쉬하니 골짜기에서 울리는 솔바람 소리 같고 (①애벌

끓음: 끓기시작함 약 70℃

세차게 끓어 오르니 급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같구나 (②두벌 끓음: 기포 생기며 끓어오름 80~90℃)

수레와 번개가 끊임없이 일어나듯 하고 (③한창 끓음 100℃)

수레를 급하게 몰아 험하고 꼬불꼬불한 고갯마루를 넘듯 하더니(④ 불길 멈추고 잦은 불로 뜸들임)

다시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잠들고 나쳐야 파도가 일지 않고 고요히 숨죽이도다 (⑤불이 꺼짐)

커다란 표주박으로 한잔 뜨니 빙설같은 빛이 나고

간담이 밝게 탁 트이어 신선과 통하네

.....

고요한 밤에 차를 달임

영수첩 서씨

여러 해 동안 은근한 불로 작은 다로에 차를 끓였스니

신기하고 영묘한 공덕이 틀림없이 조금은 있으리

차 한 잔 마신 뒤 거문고를 어루만지다가

밝은 달을 바라보니 누군가를 부르고 싶네

봄날 다반의 푸른 잔에 붉은 옥같은 차를 올리느라

소래된 벽은 연기가 서려 얼룩져 있네

전에 가득한 것이 어찌 꼭 맛있는 술이어야 하리

차 마신 후 읊음

이색

작은 병에 샘물을 길어
깨어진 술에 차를 달이네
귀가 갑자기 밝아지고
코로는 다향을 맡네
갑자기 눈에 가리운 편견이 없어지니
밖으로 보이는 데에 티끌이 없구나
혀로 맛본 후 목으로 내려가니
살과 뼈가 똑발라 비뿔어짐이 없도다
가슴 속 영혼의 마음자리는
밝고 깨끗하니 생각에 그릇됨이 없네

돌샘물로 차 끓이다

초의선사

하늘빛은 물과 같고 물은 이내 같도다
이곳에 와서 논 지 이미 반 년
명월과 함께 누워 지내던 좋은 밤이 몇 번이던고
많은 강에서 지금 백구를 마주하고 조네
남을 시기하는 것은 본래 마음에 없으니
좋다 낫다하는 말이 어찌 귀에 들어오리
소매 속에는 아직도 녹차가 남아 있으니
구름에 의지하여 많은 샘물로 또 차를 끓이네

차를 마신후의 신선된 기분

초의선사

속화같은 차를 한 잔 마시니
겨드랑이에 바람이 실어
몸이 가벼워져 하늘을 거니는 것 같네
밝은 달은 촛불이 되고 또한 친구가 되며
흰 구름은 자리되고 아울러 병풍이 되어주네

산가에 부쳐

길재

최소리 바람 불지 않으니
단칸방도 편안하고
명월이 뜰에 가득하니
혼자 천천히 거닐기도 한다
취마 끝에 빗물이 계속 흐르면
이따금 베개를 높이하여 꿈을 꾸고
산에 눈이 펄펄 날릴 때는
차를 끓여 혼자 따라 마신다.

차를 준 백령사에게 감사함

이승인

선생이 나에게 화전차를 나누어 주니
색과 맛이 향기와 어울려 하나하나 새롭도다
하늘 아래 떠도는 한을 깨끗이 씻어 주니
뉘라서 알리오 좋은 차는 좋은 사람과 같음을

피어나는 불에 맑은 샘물로 손수 끓여
푸른 다원에 향기로운 차를 따라 마시니 더러운 냄새를 씻어내네
벼랑에 선 백만 창생의 운명이지만
봉래산에서 각고 수행한 신선과 비겨 어떠할까 묻노라

영화보기를 통한 북한여성의 이해

일시 : 2007년 9월11일(화) 오후6:30

이명자 (북한영화 전문가, 전 동국대 연극영화과 강사)

1. 북한에서 영화란

<해운동의 두 가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선 북한에서 영화란 무엇인가부터 정의하고자 한다. 남북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북한에서 생각하는 영화의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보지 않고서는 북한영화는 그저 '재미없고 지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 선전선동 수단

북한에서 영화는 선전선동 수단이다. 선전이니 선동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낯설 뿐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 용어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영화들이 상업적 속성을 띄는 것과 달리 북한영화는 국가에서 제작을 책임지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창작원리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원리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다.

당성은 당의 정책을 따르라는 것으로 김일성은 영화가 '당보의 사설'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랬다. 이는 당정책을 인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영화가 앞장서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당성은 북한영화만의 특징은 아니다.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지만 넓은 영토에 효과적으로 혁명의 내용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선택된 것이 영화인 것이다. 영화는 대중이 관람할 수 있고 필름의 복사본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영화의 호소성(매력)으로 인해 혁명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영화의 장점을 일찍부터 정책 홍보에 이용한 것이다.

계급성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맞는 영화를 만들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영화에서 노동하는 자들의 긍정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상업 또는 산업자본가의 이익에 맞는 영합하는 영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영화를 만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인민성은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인민은 단순한 대중과는 다르다. 대중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합을 뜻한다면 인민은 정책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대계급은 인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민성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인민들의 변화와 관심사를 반영하라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있다.

2) 인민 교양서

북한에서 영화는 인민 교양서이다. 영화가 인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터민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한영화가 주제의식이 없다고들 한다. 인민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영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남한영화는 ‘어지럽고 정신없는 영화’로 보이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영화 속 인물 따라 배우기 운동을 종종 전개한다. 그것은 영화가 하나의 모범으로서 인민들에게 이상을 제시해주고 인민들은 그것을 현실에서 배우고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 결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희생의 대가는 돈으로 환급되지만 북한은 이것을 윤리적 보상으로 대신한다. 훈장, 명예와 같은 것이 중요시 되는데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 이 윤리적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문학이다

북한에서 영화는 문학에 포함된다. ‘문학예술’이라고 할때 소설, 시, 희곡과 더불어 영화가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과 영상예술을 구분짓는 것과

는 대조된다. 문학에 포함되기에 북한에서는 영화연출가보다 영화문학작가(시나리오 작가)를 중요하게 언급한다. 영화가 끝나면 올라가는 자막에서도 영화문학작가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4) 대중오락물

당연한 말이지만 남한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북한영화도 북한에서 대중적 오락물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다양한 오락거리가 적은 북한에서 영화가 오락물로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한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 북한에서도 연인과 가족과 휴일에 영화를 보러가고 인기있는 영화는 암표도 팔린다. 따라서 북한영화가 당정책을 그저 읊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려고 애쓴다. 당연히 북한영화에는 당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인들의 사랑과 갈등, 가족간의 오해와 용서, 개인적 성공에 대한 욕망과 좌절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2. 영화 속에 재현된 북한 여성

1) 아들의 혁명을 도와주는 어머니

북한영화에도 강인한 어머니가 많이 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편모가정을 이끄는 강한 어머니는 남북의 공통된 서사인듯 하다. 남한의 강한 어머니가 최근 SBS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면 북한영화에서 어머니의 대표적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고 김일성주석의 어머니 강반석여사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지만 무엇보다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아들 혹은 아들세대의 인물들이 갈등을 겪을 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을 혁명으로 이끌고 채찍질하는 인물이다.

<피바다>에서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무지 속에서 혁명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결국 공산주의자의 가르침을 받고 혁명가가 되며 마

지막에는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 강인한 여성으로 재탄생한다. 가장의 부재 앞에서 아들 딸을 교육시켜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어머니는 남한에서라면 자식들의 경제적 성공과 그로인한 개인적 만족에 이르지만 북한에서라면 해방이나 혁명적 대의를 위한 행위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2) 여자가 아닌 친위전사 또는 노동자

북한의 체제 성립기에 여성정책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46년 토지개혁 당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하였으며 이어 46년 6월 24일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규정과 모성보호 규정을 마련, 같은 해 7월 30일의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성해방보다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선차적 과제로 설정하면서 여성문제는 하위문제로 취급되었다.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여성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꿔버려 여성은 혁명전사, 천리마 전사 혹은 전사의 아내로서 동지와 함께 전투나 노동에 참여하는 인물로 영화에 재현되었다. 초창기 영화일수록 남녀의 성구별은 무의미할 정도로 영화 속의 여성은 여성적 목소리를 내는 존재라기보다 ‘남성화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여성의 대표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꼽을 수 있는데 그녀는 김일성 수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필한다는 의미로 ‘친위전사’로 불려졌다. 김정숙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를 보면 그녀는 군복제작을 하는 임무를 맡아 아무도 적지 한가운 들어가 활동한다. 병사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기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는 김정숙의 이미지는 노동여성의 이미지 그대로이다.

전사나 노동자로서 여성은 여성적 정체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남녀 유격대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남매애와 같은 것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신념은 인물들의 성적 차이를 지워버리고 정치적 차이

만을 내세운 결과 성정체성과 성적 이슈들은 침묵 속에 갇혀버렸다.

3) 꽃분이는 꽃만 판다

북한의 3대 혁명영화 가운데 하나로 불려지는 <꽃 파는 처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병에 걸려 그나마 일을 할 수 없고 동생은 배고파 울고, 꽃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한영화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주인공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꽃 파는 처녀>의 꽃분이는 시장에 나가 꽃을 판다. 그러나 꽃장사가 잘 될 리 없고 장거리를 헤매는 그녀가 불쌍했던 듯 다른 노점의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유곽 앞에 가서 팔면 잘 팔릴 것이라고 귀뜸해준다. 그리고 유곽을 향해 총총가는 꽃분이.....

이쯤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익숙한 서사는 70년대 유행했던 '호스테스 영화'의 그것이다. 집안이 파산하자 오빠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리자 대학에 다니던 여주인공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벌기위해 호스테스가 된다.(노새한 감독의 <365 * 26=0>)

그러나 기대와 달리 꽃분이는 꽃만 판다. 현실을 무시한 서사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면 남한에서 대부분 남성 감독에 의해 쉽게 이야기 혹은 갈등을 푸는 방식으로 여성신체를 이용해 온건 아닐까 의문이 든다.

4) 엄마로서 아내로서 슈퍼우먼

산업화 과정에서 북한은 여성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남한에 비해 적은 인구와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도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필요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에 대한 이중성은 북한영화에도 나타난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자 여성은 노동영웅으로 호출되는 한편 가사 노동 중 사회화되었던 많은 부분이 실질

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자 여성정책의 이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마를 깨우지 말아>는 이런 모순을 드러낸다. 연순과 성실 두 여고 동창생은 연구자의 길을 결심하지만 결혼과 육아, 가사노동에 부딪히면서 성실은 연구자의 길을 중도에 포기한다. 연순도 애기젓가루(분유) 연구에 매달리지만 연구 사업이 늦어지면서 탁아소에서 딸을 데려오지 못하는가하면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오랜만에 다니러온 시어머니의 배웅도 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남편이 연순의 일을 지지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오지만 자신의 일이 바빠지자 그는 곧 집안일을 모두 부인 책임으로만 돌린다. 아내가 슈퍼우먼이 되어 엄마와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 어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길 바라는 것은 남북한 남성들의 공통된 바람인 것 같다.

3. <해운동의 두 가정> : 이혼과 가족해체의 징후

북한 가족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없는 점이라고 앞서 밝혔다. 그러나 김정일시기 영화들에서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나의 가정>)와 가정의 해체를 예고하는 이혼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결합이나 통합과 같은 주제들 사이에서 이혼과 해체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이혼을 다루는 영화 <해운동의 두 가정>과 TV드라마 <가정>은 결말에서 가정해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전면화하고 있으면서 '해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완화와 더불어 그것이 대중의 무의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영화 속 이혼문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북한에서도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해운동의 두 가정>은 별이네와 봄이네 두 가정을 대조하는 수법으로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별이네가 봄이네 옆집으로 이사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별이엄마 연희는 유명한 가수로서 봄이네 부부 학영과 수옥이

좋아하는 스타이다. 두 사람은 연희의 남편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지만 이사오는 날 연희의 남편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도 보았듯이 연희의 남편 류진은 과학자인데 무니켈 연료봉을 연구하고 있으며 가정일에는 무심한 사람이다. 연희는 과학자 집안은 모두 그러려니 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옆집의 학영도 준박사의 과학자이지만 자신의 남편 류진과 달리 가정에 충실하다. 연희는 남편과 학영을 비교해 보면서 가정일을 등한시하는 남편에게 실망감이 커져간다. 영화의 전반부는 연희-류진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여주다가 류진이 국가의 요구인 무니켈 연료봉을 연구하기 위해 가정일에 무심했다는 면죄부를 얻으면서 후반부는 자기만족에 빠져 연구보다 돈벌이에 나선 학영과 그런 남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수옥의 갈등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에 선물하는 보석화가 봄이네에서 별이네로 다시 봄이네로 그리고 마지막에 별이네로 옮겨지는 이동을 따라 어떤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가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화의 주요 갈등은 류진과 연희 사이에서 일어난다. 류진은 자기네가 이사가는 날도 모르고 아이의 돌이나 아내 생일도 챙겨준 적 없이 자기 연구에만 몰두해왔다. 그런 류진에 대해 점차 실망하던 연희가 결정적으로 봄이네 가정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에게 이혼제기를 하면서 영화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가 충성과 효성의 주인공인 류진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변화, 소비, 쾌락을 말하는 연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관객은 영화에서 연희에게 동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연희는 남편 없이 혼자 낯선 곳으로 이사해 못질을 하다 망치에 다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오해의 시선을 견뎌내기도 한다. 또한 봄이네에서 열린 반사회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봄이네 집을 본 연희는 단출한 자기집과 달리 '잘 꾸러진' 봄이네를 계속해서 휘둘러보는 것으로 부러움을 표현한다. 팬(pan)을 통해 천천히 제시되는 책장이며 벽에 걸린 사진과 학영의 박사증 등 잘 꾸러진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관객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이 장면에서 연희의 부러움은 관객의 부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어 연희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 다음 장면에서 빈집에 아이는 맨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남편에게 봐 달라고 부탁하고 나간 밥솥은 까맣게 타버렸고 남편은 온데간데없는 것이 보여진다. 이런 대조는 연희가 느낄 실망감을 관객이 함께 느끼도록 하는 수법이다.

연희와 류진의 첫 부부싸움 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부르는 노래는 그녀 자신의 신세를 더욱 초라하게 한다. 그 가사는 ‘언제나 말없이 정답게 웃음지으며 가정에 봄향기 꽃피는 그대의 아내 그 마음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그 수고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인생길 약속하던 그 시절처럼’이다. 연희가 마치 류진에게 애원하는 듯한 말이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류진은 한 번도 그녀의 공연을 보러온 적이 없다. 또한 연희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면서 아이를 업고 돌아오는 장면이나 혼자 빈방에 누워 우는 장면들은 관객이 연희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도록 한다. 다음은 연희와 관객을 동일화시키는 장면들이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밤, 별이를 업고 걸어오는 연희를 통솔로 보여준 후 연희의 혹시나 기대하는 시점으로 아파트 전경이 보여지는데 역시 자기 집만 불이 꺼져 있다. 계단을 올라오자 옆집 봄이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봄이엄마의 “난 정말 행복한 여자예요”라는 말이 문틈으로 들리고 연희의 우울한 얼굴이 한 번 보인다. 그녀가 자기의 현관을 열자 컷되면서 카메라가 빈방에서 문가에선 연희와 별이를 보여준다. 스크린 하단을 빈공간으로 처리한 이 장면은 특히 어두운 아파트 내부의 빈공간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주고 문가에 선 연희와 별이를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주어 집안의 텅빈 느낌과 거기서 느끼는 연희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별이를 재운후 연희의 시점솥으로 다시 텅빈 방이 보이고 컷되면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연희의 클로즈업 다음은 결혼약속선물인 도자기가 역시 연희의 시점 솥으로 보이고 다시 연희의 우는 얼굴 클로즈업이 보인다. 어둠 속의 빈공간과 도자기를 보는 연희의 시점솥은 그녀의 허전함과 서글픔에 관객들이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장면 다음에 경쾌한 체조 음악에 맞춰 옆집의 학영과 봄이가 체조하는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연희의 쓸쓸함과 비애가 더욱 대조되어 보인다. 이와 같이 영화는 연희에 대해 관

객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치와 에피소드를 제시해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영화평론에서 류진을 ‘진정한 충신’으로 평가하듯이 그는 종종 집안에 걸린 ‘충성과 효성’이라고 쓰인 벽걸이와 함께 한 프레임으로 화면화된다. 그가 연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 연구만 끝나면 내 후
에 다 보상하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희는 지금까지 참아왔으나 조금
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폭발한다.

류진: 여보 조금만 참소. 내 이제 이 연구사업만 끝나면 당신과 별이를 데
리고 금강산 구경을 가자는거요.

연희: 가자요. 금강산에도, 묘향산에도 가고 또 유원지에도 가고 저 먼 별
나라에도 가고, 헤어지기 전에(부엌에서 나가 방으로 들어간다)

류진:(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석화를 가리키며) 아니 여보, 당
신 이 그림을 어디서 샀요? 정말 참 잘 샀요. 행복의 무지개라. 이 그림이
야말로 우리집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림이요. 그러니 이진 나고 이진 당신
이요. 하하하

연희: (빨래를 개키며 류진 쪽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거기서 어느 게 당신
이고 어느 게 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치는 무지개는 어디 있어요? (몸
을 돌리며)제 오늘 말좀 하자요. 봄이네와 우린 왜 이렇게 다른가요?
(별이가 동네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고 연희는 속이 상해 별이를 밀어버린
다)

류진: (아이를 감싸며) 그래도 난 당신이 날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요.

연희: 이해요? ...가도가도 끝이 없는 당신의 길을 왜 나만이 이해하고 묵
묵히 따라가야 하는지 전 이젠 못 참겠어요. 제가 뭐 큰 것을 바라나요?
당신의 시간에서 조금만 떼내서 가정에 돌려주길 원하는데 왜 당신은 그
것마저 못들어주나요. 전 지금껏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왔어요. 남들이 퇴
근하면 부부 같이 극장구경도 가고 유보도를 거닐때 명절 때 친정에 갈
때 나만은 아버지를 찾는 별이를 안고 빈방에 홀로 앉아있었어요. 그 때
저의 심정이 어땠는지 당신은 생각이나 해 봤나요? 당신은 제가 좋아 그
길을 걷지만 당신한테 달려있는 아이와 저는 어떻다는 걸 왜 모르나요. 그

만큼 불행해진다는 걸 왜 느끼려고도 안 해요? 이 옆집을 좀 봐요. 당신은 왜 봄이 아버지처럼 못 살아요. 정말이지 난, 난 옆집 봄이 엄마가 부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연희 쓰러지듯 엎드려 울고 이때 연희의 팔에 맞아 탁자위에 있던 도자기가 떨어져 깨진다)

류진:

이 장면은 부엌에서 연희가 아들 별이의 원죽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외박한 류진이 들어와 음식을 싸 가지고 또 나가려 하자 연희가 뒤집개를 떨어뜨리고 그제야 연희의 기분을 눈치챈 류진이 그녀를 달래려 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부엌에서 거실, 방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거의 연희 편에서 보여주어 류진에 비해 연희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희가 부엌에서 나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류진은 연희를 따라 나가나 방으로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엉거주춤 서서 보석화를 보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속에서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류진에게 등만 보이고 있는데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가 연희가 말을 시작하자 연희편으로 돌아 그녀의 옆얼굴에서 앞얼굴에 이르는 곳을 보여준다. 연희의 대사동안 류진의 반응속은 고개숙인 그의 미디엄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미디엄으로 보여주는데 비해 연희는 계속 클로즈업에 가깝게 보여주면서 긴대사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도록 한다. 이 갈등 이전에 이미 여러 장치를 통해 연희에게 연민을 느낀 관객으로서는 흐느끼며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연희의 클로즈업속에 강하게 감정이입하게 된다.

류진과 연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의 갈등 속에 류진으로 표상되는 근대 개발주의 논리와 변화하는 현세적 사고 중심의 현재 대중의 논리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내일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추상적 시간을 끌어들여 현재를 희생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수령제 하 북한의 근대화 논리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연희는 헤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연희의 사고 밑에 깔려있는 것이다. 게다가

연회는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그것의 보상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것은 김정일 시기 북한 대중들이 느낄 만한 허탈감인 것이다. 연회의 심정을 보여주듯 결혼 기념품인 도자기가 탁자에서 굴러 떨어져 조각난다.

여기서 북한 대중들이 새롭게 가치평가하고 있는 소비와 일상행복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북한에서도 고전 사회주의 시기 최대 과제는 자립적 산업화로 표방되는 근대화에 있었다. 이는 국가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남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중소라는 대국에서 벗어나 자력갱생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같은 시기 남한에서 박정희 개발독재로 상징되는 국가 주도의 산업발전과 근대화 정책이 진행된 것과 유사하게 북한도 '국가 사회주의'로 분류될 만큼 국가 중심의 가부장적 발전 기획을 관철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근대화는 산업화, 성장중심, 생산성 중심의 성장을 향한 끝없는 욕망 등 근대의 남성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¹⁾ 이러한 70년대 체제로 대표되는 고전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은 김정일 시기 체제 전환기에 들어서 의심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틀짜기 아래에서 경제성장을 향한 욕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고전기 남성 중심의 근대화 전략에서 흔히 여성적 측면으로 억압되었던 소비, 쾌락, 개인성과 같은 가치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영화는 단순히 류진의 과학적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별 편지를 써 놓고 지방공연을 갔던 연회가 집으로 돌아오니 고장났던 TV가 고쳐져 있고 깨진 도자기는 붙여져 있으며 자신과 별이의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게다가 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여보 나도 이젠 밥 할 줄 아오"라는 말로 자신도 학영처럼 일상을 함께 하는 남편이 될 것임을 약속한다. 이것은 이전 영화에서 공적 성공이 사적 성공을 보장해주던 영화들과 달라진 사실을 보여준다. 류진은 공적으로는 꽤 성공한 박사과학자이자 충실한 연구자이지만 사적인 갈등과 실패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된 인식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하다. 수령제는 앞서 밝힌

1)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성별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2002),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서울: 푸른 사상, 197쪽.

대로 갈등을 집단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집단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사적영역을 축소시키면서 사적영역의 공공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실리 사회주의 하에서 사적영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공적 성공과 사적성공이 어느 정도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게다가 영화는 공적영역의 영웅이 사적영웅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북한영화에서 개인적 성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이기적 인물은 비난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든지, 사적인 영역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문 것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영화에서 공적으로 고귀한 인물은 사적영역에서도 성공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웅은 ‘소녀와 트랙터를 얻는다’ 이것이 영화의 공식처럼 보여졌던 것이다. 이제 공적 해결을 통해 모든 갈등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문제는 또 다른 해결을 요하는 다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이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비되게 사적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사적영역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적영역의 증가란 소련의 예에서 보듯 체제 변화의 핵심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개혁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사적영역의 활성화’였던 것이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위와 아래 모두에서 사적영역에 관심을 쏟음으로 해서 고전체제에서 벗어나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임을 짐작하게 한다. 영화는 바로 이런 변화를 류진의 충성과 더불어 연희의 현재 시간과 일상, 소비에 대한 관심, 사적영역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문제를 통해 보여준다. 북한식 근대화로서 수령제의 특징은 국가업무 대 사적업무라는 대립이 흐려져 양영역이 혼합돼 있었다. 이로 인해 관료주의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사적영역이라 생각되는 문화, 종교, 가족생활, 이웃관계, 자유시간, 직업과 고용선택에까지 침투해 왔다. 그런데 김정일시기 영화들에서는 사적업무와 시공간이 공적인 것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 다른 한쪽 즉 보들레르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말했던 다른 한 쪽을 회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보고행사 및 향후 여성의 과제 모색

일시 : 2007년 10월8일(월) 오후6시30분

강의 : 정현백 (평화여성회 이사장,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

* 아래의 글은 여성신문 951호 [특집] (2007-10-13)에 실린 글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동행기

평양에서 맞은 '10월의 크리스마스'

밤이 되자 거리의 나무엔 화려한 네온장식

경협 훈풍속 새역사 흐름에 여성이 주체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총 5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여성분과는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홍남 국립박물관 관장, 그리고 필자로 구성됐다. 안숙선 명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문화예술계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은 경제계를 각각 대표해 참석했다. 이는 단 한명의 여성(당시 장상 이화여대 총장)과 여기자 한명이 참석했던 지난 2000년의 1차 남북정상회담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을 보인 것이다.

또한 특별수행원은 7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여성이 1개의 분과를 구성했다. 2000년에는 한명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여기자의 참가도 현저하게 늘어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간의 여성계의 여러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휴전선을 넘어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불과 1시간30분 만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짧은 실제거리와 우리 마음 속의 거리를 비교하며, 필자는 새삼 우리 마음 속의 분단을 생각해보았다. 평양 시내는 6·15 공동선언이 선포된 2000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회색 도시였던 평양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선생이 명명한 대로 우리는 평양에서 '10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평양 시민의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랄까? 밤이 되자 거리의 나무에는 화려한 네온 장식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기 사정도, 사는 형편도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 이는 그간 남한이 지속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한 것이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시장경제 조치가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전에 비해 우리가 방문한 평양은 어느 구석을 돌아보아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난 8월에 심각한 수해를 입은 도시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여성분과는 북측 여성과 두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영부인 간담회와 여성계 분과모임이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이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는지라 권양숙 여사와 여성계의 만남에는 박순희 여맹위원장과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여성인사가 참여했다.

이에 비해 여성계 간담회에는 김경옥 여맹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여성교류를 통해 만나온, 익히 아는 여성들이었다. 권양숙 여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주로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나, 여성계 간담회에서는 의제로 가지고 간 영유아사업을 남북 여성이 함께 하자는 제안과 여성교류의 정례화를 요구했다. 또한 북측 여성대표단의 경우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과 민족문화 창달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간 여성교류가 간헐적, 부정기적으로 진행돼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활동이 어려웠던 까닭에 특별히 요구한 여성모임의 정례화는 타결되지 못했다. 좀더 자주 만나자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영유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실무

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정도에서 대화가 종결됐다.

민족문화 창달에 여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역시 북측의 제안을 경청하는 정도에서 모임을 끝냈다. 실제로 이번 모임에서는 합의되거나 타결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영유아 지원이나 교류 정례화 문제가 정상회담과 나란히 열린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은 양측 모두에게 실행의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2007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본론'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과 병행해 남북이 주체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낸 것이 큰 성과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곤란을 겪었던 통관, 통행, 통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는 여성이 전체 노동자(13000명)의 84.6%를 차지한다. 내년 초에는 그 수가 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남북경협역사적 현장에 여성이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도 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 실현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자.

** 참고 : 여성신문 950호 [특집] (2007-10-05)

홍지영 / 여성신문 기자 (jee@womennews.co.kr)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기사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1차 때와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보인다. 그 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공식의제 부문에 정치·경제·문화예술 등과 함께 여성 의제가 포함된 것과 여성계 대표인사 3명이 특별수행원 자격

으로 참석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일 특별수행원의 한 사람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정현백(54)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만났다. 정 대표는 내년 8월 서울 또는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여성 6자회담' 준비차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며칠 전 귀국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미국 방문 중에 들었다고.

정 대표는 방북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급히 다녀오느라 숨들릴 틈도 없어 보였지만, 혜화동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성계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다. 소감이 어떤가?

"여성계를 대표해 회담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여성분과가 생겨 더 없이 기쁘다. 특별수행원 49명은 각각 정치, 대기업 대표, 업종별 대표,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간담회를 갖는다. 여성분과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부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웃음)"

-여성계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 예정인가?

"권양숙 여사가 참석하는 간담회와 남북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는 간담회 등 두 차례가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남북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시간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도 할 생각이다. 현재 남한측에서는 모자보건 및 영유아 사업 지원, 남북 여성교류 정례화 등을 의제로 삼았다. 민간단위에서 남북 여성교류는 지속돼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성교류 정례화 합의에 주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회담 뒤 권양숙 여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대회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다."

-지난달 있는 베이징 6자회담 직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회담 결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회담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시기는 없다.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도 유연해졌고, 북핵문제가 차츰 풀려가고 있는 시점 아닌가. 사실상 이제껏 6자회담은 남북이 주도한다기보다는 끌려가는 입장이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 및 평화구축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6자회담을 남북이 함께 주체적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차후에 남북 대표들이 만나 느슨한 형태로라도 평화선언을 했으면 한다."

-이번 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대표께서도 일찍이 지금보다 큰 틀의 남북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을 통하면 개방이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협력을 안할 수 없다. 작년 한해 10만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6년새 12.7%나 증가한 수치다. 정규 항공노선은 없지만 한달에 열번 전세기가 뜨고 있다. 큰 선박도 하루에 34차례나 오고 간다. 북의 항구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하루에 60~70척도 거뜬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남측으로 내려오는 퇴근 버스가 오후 5시에 단 한차례 운행된다는지, 전화회선이 고작 500회선만 설치돼 있는 등의 제도적 제한을 하루 빨리 뛰어넘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험을 위한 제도화 및 법제화가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경협이 확대되면 여성기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예상하나?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여성기업인의 개성공단 진출을 주장해왔다.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여성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의 공동 관심사는 바로 경협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계 인사 규모가 18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단 한명(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

협 지원과정에 여성의 진입이 너무 막혀 있다. 사석에서 통일부 관계자에게 '여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관계자 말로는 여성계 간담회에서 정책화되면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두고 보겠다.(웃음)"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도로 통일 비용과 '퍼주기식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독의 경우 통일 전에는 매년 32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동독에 지원했고, 통일 후에도 GDP(국내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약 1000억달러(100조원)를 15년간 지원했다. 우리가 올 한해 지원한 4억달러(4000억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분단이 지속됨으로써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을 생각해보지 못한 통일비용의 퍼주기 논쟁은 맹점 그 자체다. 사실 모든 북측 지원 비용은 남북기본관계법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돼 있다. 여야, 양당간의 합의를 통해 액수를 결정한다. 그나마도 총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마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 지출에 대한 지적이 야당에 의해 나올 때마다 답답할 뿐이다."

DMZ 평화기행

일자 : 2007년 10월12일(금)

최양현진 (상생과 평화 대외협력위원장)

I. 휴전선이란 무엇인가

1.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L)의 개념과 역사

DMZ

비무장지대(DeMilitary Zone)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이다.

1953년 정전 당시의 남북대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서쪽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 고성군까지 200m 간격으로 1292개의 말뚝을 박았다. 이 분계선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한 각 2km 지역을 후퇴한 다음 이 공간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는 서로의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역 역할을 한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정전협정 제1조 10항)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155마일(248km) × 4km = 3억평이 된다. 동쪽의 끝은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고 서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가 된다. 서쪽으로 임진강과 한강으로 나오는 지역은 비무장지대가 아닌 한강하구수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적은 이만큼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남북 상호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앞당겨 군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가장 가까운 고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태풍전망대이다. 태풍전망대는 군사분계선에서 전망대까지 800m이며, 북한군이 있는 초소까지는 1,600m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한강하구수역

정전협정 상에 한강이 서해에 유입하는 "한강하구수역"은 정전협정의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제5항에 의해서 남북한 쌍방의 민간선박(주로 어선)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이 규정의 성격은 육지상의 비무장지대가 남북의 민간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협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5항 :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항행 이용할 수 있는 이 특수 구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동쪽)에서부터 다시 한강이 되어 강화도(江華島) 북변과 북한의 황해도의 예성강이 만나서 넓은 한강하류 수역을 형성하여 넓어지면서, 북쪽의 굴당포 끝과 남쪽의 작은 섬 불음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모양의 남북간 수역이다.

이 규정은 그런 용어나 표현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강하류에서 황해에 접하는 남북한 사이의 수역은 일종의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 ways)"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이 서해안 한강하구 수역내에서 남북한의 민간 배들은 일종의 "자유통행권(right of free passage)" 또는 "무해동행권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인정받고 있다. 구역은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 "쌍방이 공인"하고 또 "쌍방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규정되었고, 지금까지 40여년간 그렇게 유지되었다.

이 "쌍방"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육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제외하면, 서해바다에서 이 "한강하류 수역"만이 북한과 유엔군 총사령관의 "쌍방"이 인정 합의하고 "쌍방"이 "함께" 관리해온 수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한 해군 충돌 후에 우리 정부(국방부)당국자들이나 언론계의 어떤 식자들은 이른바 "북방한계선"과 그 선을 따라서 남쪽에 한국측이 설정한 "완충구역"이나 "어로한계선"을 북한측이 1991년 12월 13일에 조인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와 제10조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는 정전협정에 관하여 어느 "한 쪽"의 행위나 결정을 적시할 때는 그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 "일방", "자기측", "상대측(또는 상대방)"으로 표기하고, 협정당사자 또는 남북이 "함께"인정했거나 함께 관할했거나 하는(해 온) 일을 적시할 때는 반드시 "쌍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의 엄격한 구분은 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협의과정에서, 북한쪽이 정전협정의 쌍방(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 중공군 사령관)이 "함께" 인정하고 합의하여 조문화한 결정사항으로써 함께, 즉 "공동"으로 관리해 온 일만을 "쌍방이 지금까지 관리하여 온" 선 또는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한쪽"과 "양쪽"을 엄격히 구분한 이 용어의 뜻을 한국(남한)측 대표들이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북측은 "북방한계선"은 남한이 "자기측" 또는 "일방"으로 설정한 선이지 정전협정상의 "쌍방"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선 또는 구역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이 협정용어의 분별적 사용은 이번 해군충돌과 "북방한계선"의 협정상 효과를 가르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는 중대한 사실을 많은 논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어느쪽 해석이 옳은가? 의당 남한(한국)쪽의 편을 들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유엔군총사령관(미국)은 남북해군 충돌 이후 남한쪽에 유리한 성명이나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유엔군 총사령

관)의 이런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음미해 볼 일이다.

서해5도와 NLL

- 설정 역사 및 분석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극동 해군사령관은 1950년 7월 4일 봉쇄한계선을 설정하였는데, 동해는 41도선, 서해는 북위 39도 30분선으로 설정하여 해상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며, 1951년 9월 27일에는 UN군 사령관이 해상 방위수역인 Clark Line을 선포하여 적성선박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의 체결 및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UN군 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 제2조에 따른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정전협정 내용의 이행과 잠재적인 군사교전을 줄이려는 의도 하에 UN사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서해지역 남북한사이에 이른바 NLL을 설정하고 이를 해군부대에 시달하였다. 이 선은 물론 정전협정에는 근거가 없으며 19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한 미해군의 작전명령서상에만 명시된 선이었다. 물론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된바도 없다.

동 NLL은 UN사가 1952년 9월 27일 당시에 발표한 소위 "Clark Line"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뜻에서 NLL은 일종의 "방어수역" 혹은 "전쟁수역"을 의미 할수 있다.

단지 공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실시한 경비구역의 경계는 대체로 북방한계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북한 해군은 1953년 8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약 20년동안 사실상 북방 한계선 이북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UN사가 정한 일방적인 통제선을 남한과의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오고 있다고 한다.

위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지난 20년동안 UN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NLL선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은 수긍을 쉽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설사 UN사의 일방적 NLL선언을

실력으로 부정하고 싶어도 6.25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도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 괴멸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빈약한 해군력으로 NLL선 이남을 장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후 북한은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의 관계조항을 들어“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은 북한의 관할 수역이며, 이들 도서 자체가 정전협정에 명기된 대로 UN군 통제 하에 있음은 인정하나, 그 주변수역을 통제하는 북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통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¹

이 주장이 있는 후 북한은 NLL 남측에 위치한 우리측 함선을 정전구역의 "침범"으로 비난하였고, 의도적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그들의 함선을 월선시켰다. 그러나 서해 교전이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통항하는 우리측 함선이 북한에게 사전 통항승인을 받고 통항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종래(1973년 10월)보다 더 의도적인 북한측 함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빈번하게 되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한국측 서해 경비선은 북방한계선보다 약 24해리 정도 남하 조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NLL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재해석

첫째, 북측의 NLL 월선이 남한의 영해침범행위가 되느냐의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NLL은 한국 및 주한 미해군 작전명령서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1953년 NLL을 이해당사국인 북한과 중국측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것이다. 우선 북한입장에서는 1994년 11월 이후 발효된 신해양법 제3조에서 영해 폭이 12해리 이내로 확정되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제법상 영해 12해리를 근거로 UNC가 한국전쟁 당시 일방적으로 그은 NLL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속셈은 기본합의서 제10조에서 미해결된 해상경계선을 자기에게 유리한 신해양법 영해 12해리 규정에 따라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측은 서해 5도는 분명 북한의 영해 12해리 범위에 모두 들어가 있으므로 남한의 군함이 자기들의 12해리 영해에 들어올 때에는 북

한 영해법상 사전승인 없이 들어왔으므로 영해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과연 서해 5개 島嶼가 영해 12해리를 가질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국제법적 견해는 법적인 섬(신해양법 제121조 1항)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자체의 영해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1958년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버마는 동협약 제10조에 "어떠한 국가에 속하는 섬이 다른 국가의 영해내에 있을 때 그 섬은 자체의 영해를 갖지 못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버마대표는 만약 그러한 섬들이 자체의 영해를 가지게 되면, 자체의 접속수역과 대륙붕까지 가지게 될 것이므로 그 결과 심각한 관할권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1973년-1982년 사이에 개최된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터키대표가 터키본토에 매우 인접해 있는 그리스 도서의 영해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적이 있다. 비록 터키측 도서영해 제한론 의견이 신해양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분명히 국제법상 주요한 주장으로 거론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볼 때, 분단국가로서의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면 서해 5도 자체가 북한 응진반도에 매우 인접해 있으므로 정상적 도서처럼 배타적 영해를 갖는데는 북한과 심각한 관할권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 국제법학자의 주장처럼 섬의 관할이 한국에 속하면 그 주변수역도 당연히 한국의 영해에 속한다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단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셋째, 과연 남한이 NLL을 국제관습법으로 적법하게 주장할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이 1953년-1973년까지 약 20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추후관행" (1969년 비엔남 조약법 제31조 3항 b)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20년간 묵시적 인정주장자체에도 북측이 실제로 계속 NLL을 월선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계속 했다는 미확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확인한 것에만 따르면 1973년 이후 북한은 연평균 40여차례씩 NLL을 월선하였고, 1997년에는 남북한 해군 함정간에 포격전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남북한 국지적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대두되었다. 1996년 국회 외무.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

북한 함선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다. 설사 20년간 묵시적 인정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나아가 이것이 국제법상 국가영역 취득의 시효취득으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취득시효에는 보통 50년을 필요로 한다. 또 만약에 이러한 주장이 국가의 영역 취득에 있어서 장기적 점유를 요건(*possessio longi temporis*)으로 하는 소위 "역사적 권원의 응고" (*historical consolidation*)를 차용하는 이론이라면 국제법 이론상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과연 남한 단독으로 역사적으로 NLL선 수역 주변을 古代로부터 점유해온 역사적 사실 권원이 계속되어왔느냐는 것이다. 이 주장의 문제는 국제법상 기본적으로 서해북부 海面에 관한 한국의 역사적 權原이나 실효적 점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문제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또 20년간의 장기적 점유의 성립을 입증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필요하지도 않고 용이하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요소로서 법적 확신과 객관적 요건으로 일관적 관행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일반적 관행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일반적 관행이라면 同様の 실행이 반복.계속되어 일반성을 갖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실행은 [항구적.균일적 관행](*constant and uniform practice*)으로서 반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1973년 이후 NLL선을 年평균 40번씩 월선하고 있어 북한이 NLL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定型化된 실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로, 분단국인 남북한간의 법적 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잠정성, 2중성 그리고 특수성을 띄고 있어 분단고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평화통일시까지 최종적인 국가경계획정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적 관계이면서 민족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법적 상태도 전시와 평시상태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NLL선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지나치게 국제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고집할수도 없다. 북한도 1970년대 초부터 줄곧 분명히 NLL선의 불인정을 주장해 왔고, 1970년 이전에는 북한은 해군력과 어업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자기주장을 할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관습법의 적용범위는 명백히 적용반대의사를 꾸준히 표시한 당사국에

계는 적용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NLL조차도 서해5도와 북한본토와의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정확한 중간선도 아니라고 한다. 북한은 1972년 이후 지금까지 27년간 NLL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민간인 통제구역

민간인 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보호와 보안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 밖에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 Civilian Control Line) 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와는 구분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설정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km²(강원도 1,048km², 경기도 480km²)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2도 9군 24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의 휴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을 규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된 후에는 국토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 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1959년부

터 99개의 자립안정촌을 건설하였으며, 1968~1973년에는 12개의 재건촌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973년 2개의 통일촌을 건설하였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성된 이들 마을은 1985년 현재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 등 5개군 11개 읍면에 31개소,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4개군 13개 읍면에 81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1953년 8월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성동 마을(일명 '자유마을')이 설치돼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은 총 112개 마을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북방마을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출입영농이 허용되고 있다. 행정구역이 복구되지 않은 강원도 지역 52개 리, 경기도 지역 51개 리에 출입영농이 허용돼 사실상 민통선 북방지역 전역에서 부분적이거나 영농이 실시되고 있다. 당시 민통선 북방지역 인구는 총 8,799세대 3만9,725명(강원도 2,466세대 1만939명, 경기도 6,333세대 2만8,786명)으로 집계됐다.

2. DMZ의 생태

민간인 통제선은 대체로 휴전선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248km의 휴전선을 따라 북위 37°45' ~ 38°40' 사이에서 5~20km 너비의 띠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부는 급사면, 서부는 완경사면을 이뤄 동서 단면은 비대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부는 향로봉 산맥이 해안까지 뻗어있으며 서부는 광주산맥, 추가령열곡, 마시령산맥의 일부에 속하는 등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중동부의 해안분지는 가칠봉(1,242m)·대우산(1,179m)·두술산(1,148m)·대암산(1,304m)·달산령(807.4m) 등 산릉으로 둘러싸여 남북 길이 8km, 동서 길이 7.5km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분지내 평균 표고가 450m인데 반해 주변이 1,000m급 고봉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화채그릇 같다고 하여 일명 편치볼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분지의 성인은 차별침식으로 규명됐으나 운석분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부지역은 한탄강을 중심으로 북서부 평야지역과 남동부 산지로 구분되고 있다. 평야지역은 200~500m 두께의 용암대지의 일부이며, 산지는 1,000m 내외의 광주산맥 준령이 연속되고 있다.

중서부지역은 광주산맥 추가령열곡 마시령산맥의 일부에 속한다. 연천·전곡 등지에서는 평강 부근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한탄강과 임진강의 유로로 흘러들어 소규모 용암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천 변은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다. 용암대지의 풍화된 토양은 비옥해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서부지역은 추가령열곡의 비교적 넓은 凹형 계곡은 서해안 연안에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을 이루고 있다. 임진강 중·하류는 구릉지가 더욱 낮아져 저지대는 하천에 의한 충적토가 퇴적돼 매우 비옥하다. 서해안 도서 주변에는 간석지가 매우 넓게 발달해 있다.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은 구릉사이의 충적지와 더불어 해안평야를 이루고 있다.

3. DMZ와 지뢰

한반도에서 대인지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에서부터이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유엔군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량의 대인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 유엔군은 휴전선을 고착화하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통하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휴전선 일대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3년 간의 한국전쟁 동안 한반도 전역에 지뢰가 적군의 신속한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종 지뢰가 사용되어지고 한국군의 지뢰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매설한 지뢰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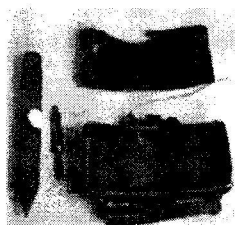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Civilian Control Line)을 설정하였다. 비무장지대는 물론이고 민통선 안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이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을 오랫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 50년대 후반부터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통선 안에 있는 전답을 농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는 민통선 내 지역에 거주하여 살도록 하였고 양구 해안면과 같이 면 단위의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주민들은 군으로부터 허가된 전답의 경작을 위하여 개간하여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뢰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대인지뢰를 가지고 놀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사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밭목지뢰를 밟아 밭목이 잘리거나 폭풍지뢰를 밟아 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여 사망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토지개간을 마치니깐 이제는 땅 주인이 나타나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많은 지뢰피해자들은 '폭발물 사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군부대와의 약속 때문에 배상신청도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민간인 피해 지뢰자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98년 2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즈가 민통선 근처 마을인 파주 금파리를 방문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윌리엄즈는 금파리에서 사는 7명의 피해자들에게 의족을 선물하면서 지뢰 사용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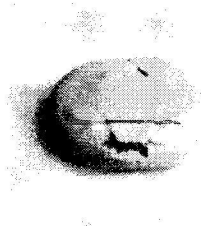
● 지뢰의 종류

MON-50 대인지뢰



이는 미국의 M-18 Claymore의 소련판으로서 방향성 파열지뢰라고 할 수 있다. 안쪽의 곡면은 폭발물 앞쪽에 쇠구슬로 충전되어 있으며 나무와 같은 곡면에 장착 할 수도 있고 또는 소형의 버팀대에 장착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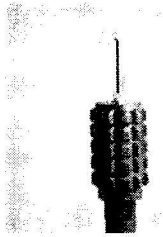
BPD-SB-33 대인지뢰



불규칙적인 모양과 소형(직경 약 9cm)인 관계로 발견이 매우 힘들며 폭발시 불규칙적인 파열이 일어난다. 유압식 대충격(Antishock) 장치가 되어있는 관계로 폭발과 인공적인 압력에 의하여 폭공이 일어날수 없게 설계되었다. 또한 매우 경량인 관계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극도로 많은 양을 운송, 목적하는 곳에 배

치할 수 있다.

PMR-2A 또는 Pomz-2 대인지뢰



많은 종류의 변형 지뢰가 있으며 이와 같은 지뢰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이루거나 최소한 한줄에 4개이상의 지뢰가 설치된다. 이와 같은 지뢰는 복잡하게 얽힌 기폭용 줄(tripwire)에 의하여 기폭된다.

베트남 대인지뢰



크기는 테니스 공 정도이며 tripwire에 의하여 기폭되는 경우 말뚝에 장착할 수도 있고 압력에 의하여 기폭되는 경우는 지표면 바로 아래에 매설할 수도 있다.

II. 철도가 연결되면 통일이 보인다

1. 비운의 철도

경의선에 이어 동해북부선이 개통됐다는 보도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운행하던 철도로, 전쟁 이후 서울에서 문산까지 운행됐다. 동해북부선은 1929년에 함경남도 안변과 흡곡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다가, 1937년 양양까지 연결됐다. 그러나 이 철로 역시 전쟁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놓여있다 최근 남북 합의로 동해북부선 철로가 연결되면서, 현재는 강릉에서 출발해 금강산역을 거쳐 원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그러면 남과 북을 관통하던 철도는 몇 개나 될까. 초등학교 시절까지 기억을 더듬으면 경원선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까지 국토를 동서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것 또한 전쟁으로 중간이 잘려나가 지금은 서울에서 신탄리까지 운행하고 있다. 다른 철로와 달리 경원선만큼은 언제 연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금강산 가는 철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 싶다. 금강산 철도는 철원에서 시작돼 내금강산에서 끝나는 단거리 궤도였다. 전쟁 직전까지의 해방공간에서는 북에서만 운행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남과 북 어디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비운의 철도이다.

경의선은 경부선과 함께 일본제국주의가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과 의주까지 가도록 1911년 완공됐다. 경의선이 통과하는 길은 예부터 서울과 중국 대륙을 잇는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였다. 수도였던 한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한반도 전역을 연결하는 총 5로를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로인 제1로가 바로 경의선이 지나가는 길과 함께 달리는 의주로였다. 의주로는 넓은 의미에서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부터

개성과 평양을 거쳐 중국의 연경까지 연결하는 핵심 루트였다. 이 길을 따라 수많은 역사가 건설되었고, 중국과 문물이 교류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길 덕분이었다.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은 이 길을 따라 중국의 연경까지 오고 가면서 그 유명한 『열하일기(熱河日記)』를 후세에 남겼다. 고려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익점 역시 이 길을 따라 중국을 다녀오면서 목화씨를 가져 와 한반도에 의복혁명을 일으켰다. 경의선이 지나가는 길은 우리 선조들이 선진국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생필품을 교환했던 간선도로였다.

길은 물과 속성이 비슷하다. 막으면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고, 막은 것의 힘이 약해지면 다시 뚫고 나간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과 함께 애환을 함께해 오던 길은 분단과 전쟁으로 막히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총연장 43.33킬로미터의 통일로. 1904년 경의선 철도 부설과 함께 시행된 일반국도 제1호선 건설에 기반을 둔 도로로, 이 길의 건설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그 배경이다.

은밀하게 남북화해 선언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는 1971년 12월부터 1972년 3월에 걸쳐 서울시계~임진각 사이 일부 구간을 고속화도로로 건설하여 민족통일의 의지를 담아 통일로라 명명했다.

원래 통일로는 조선시대 9대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로 한양에서 의주를 잇는 의주로의 일부였는데, 1984년 전두환 정부는 홍은4거리를 기준으로 길을 세분하여 서울역~홍은4거리까지를 의주로, 홍은4거리~진관내동 서울시계까지를 통일로라 했다. 따라서 통일로는 현재 홍은4거리~진관내동 서울시계 구간과 진관내동 서울시계~임진각 구간으로 구분돼 있다.

통일로와 함께 북으로 가는 경의선 철길은 임진각 구역에서 철조망에 막혀 더 이상 북으로 가지 못하고 끊긴 상태다. 하지만 통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임진각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애가 타는 실향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감격적인 경의선 개통

2000년 6월 남북의 두 정상은 막힌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9월에는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했다. 이듬해 6월 개성공단의 착공은 경의선 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신1번 국도를 연장하며 남북의 물류와 인원을 수송하는 중추적 연결 도로로 새롭게 변하게 됐다.

경의선은 2007년 5월 17일,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을 알리며 재개통돼 민족의 꿈과 염원을 실고 문산과 개성까지 힘찬 기적을 올렸다. 1946년, 마지막 기차가 달린 지 61년 만이었다.

경의선 최후의 기차를 몰았던 한준기 씨는 “과거에 있었던 역 주변 건물은 하나도 없다”며 “목조건물이던 개성역도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의 손을 잡고 “내 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정작 손을 잡고 감동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은 그동안 꾸준히 민족적 역량을 축적해온 그의 이웃들 — 보다 외연을 확대하자면, 남쪽의 전체 시민들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철도 재개통처럼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날이 오면 막상 그것을 두 어깨로 감당해야 할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기 때문이다.

경의선과 함께 연결된 동해북부선 역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금강산을 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교통수단 이용됐다. 춘원 이광수는 서울에서 원산을 거쳐 장전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갔을 것이다.

본래 동해북부선은 안변~흡곡 사이가 개통이 되고 1937년 12월 1일 강원도 양양까지 180킬로미터가 건설됐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8·15 광복을 맞이하여 완공하지 못한 채 6·25 전쟁이 발발하여 휴전선~양양 사이의 철도는 철거됐다.

동해북부선은 1937년부터 14년 동안 강원도 영북지역과 서울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본래는 한반도 동부를 종단한다는 명분 아래 경원선의 안변역에서 분기하여 동해안을 따라서 통천·양양·강릉·영덕·포항에 이르는 478킬로미터의 철도를 건설하고, 당시 포항~울산 간을 운행하는 협궤 사철 선로를 인수하여 표준궤로 재건설을 함으로써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였었다. 지금은 북한 지역에 속한 강원도 통천은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다.

개통 당시부터 동해북부선은 태백·강릉 주민들이 서울을 오가는 최단 거리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양양에서 원산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에 외금강을 경유하였기 때문에 금강산을 찾는 수학여행 학생들과 관광객들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철도였다.

강원도 양양군 물치항은 어시장으로, 지금의 대포항보다는 조금 작지만 동해북부선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첫 구간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각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선로만 깔면 바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 옆의 철도 부지는 마을의 차도로 활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닭을 키우거나 목재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물치항을 지나면서 다시 폐 교각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작은 하천을 따라서 계속 가다보면 물치역에 다다를 수 있다.

물치역은 당시에 아주 작은 간이역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가정집이 플랫폼을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과 전쟁으로 세상이 두 번씩이나 뒤바뀌었는데도 그나마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동해북부선이 시작하는 양양역은 양양읍 청곡리 부근에 있다. 1층짜리 단층 건물에 자리 잡은 구 양양역사는 관사와 식당까지 갖춘 제법 규모가 큰 건물로, 당시에는 30여 명이 근무했다고 한다.

동해북부선과 경의선은 민족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북으로 연결돼 여전히 대륙으로 뻗어 나아갈 기상을 품고 있으나, 경원선과 금강산 철길은 남북

철마의 종단점을 간직한 채 아직도 민족의 비원을 속으로만 되새김질하고 있다.

그중에서 경원선은 서울에서 신탄리, 원산에서 평강까지 끊어진 철길만 이어주면 되지만, 금강산 철도는 시작인 철원역에서 내금강까지 철로가 완전히 파괴돼 다시 기차가 달릴 날이 요원하기만 하다.

경원선은 용산을 출발해서 한강변을 따라 지금의 국철 구간인 왕십리를 거쳐 의정부·동두천·연천·철원을 경유하여 원산까지 가는 노선이다. 그러나 전쟁과 함께 철도도 끊겨 지금은 의정부에서 신탄리까지만 운영을 한다.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돼 모스크바는 물론 유럽 각국의 수도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 경원선이, ‘의신선’으로 쪼그라들고만 썩었다.

경원선만큼 불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도가 세상에 또 있을까? 분단국 철도의 끝에서 우리는 항상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과 함께 철도 종단점이라는 뜻을 보게 된다. 전쟁 이래 경원선의 끝자락이 된 신탄리 역에도 예외 없이 철도 종단점 표지판이 서 있다.

신탄리역에서 열차를 내려 철원 대마리로 가다 보면 길옆에 옛날 원산으로 달리던 철길이 논밭과 개천을 사이에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게 꼬리를 물고 있다. 경원선은 이렇게 종착역만 끊어진 철도가 아니다. 과거 용산에서 출발하던 기차는 지금은 국철로 바뀌어서 의정부로 달리고 있고, 의정부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의 통제로 철도의 시작도 끊겨 있다.

3. ‘철마는 달리고 싶다’

경원선 철도를 타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두천 미군부대로 가는 이어폰 낀 미군 병사들과 나뭇 캐러 나온 아줌마들, 소요산으로 가는 등산객들에 최근에는 동두천에서 일하는 동남아 여성들까지 가세했다. 다양한 세계인들을 조그만 객차 안에서 모두 만나게 된다.

경원선을 끼고 있는 소요산은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전설이 서려있는 곳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경기도 소금강’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원효는 입산수도에 정진하였고 그

곁에서 요석공주는 원효대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이곳 소요산에는 두 사람과 얽힌 지명이 많다. 요석공주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별궁 터와 원효가 수도했다는 원효대가 있고, 원효폭포는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낸다.

공주대는 원효가 요석공주를 마음에 두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사랑하는 공주를 세속에 두고 면벽수도한 원효와, 산속까지 찾아와 침묵 속에서 허드렛일로 큰스님을 보필한 두 사람의 인연이 산자락만큼이나 아름답다. 의상대사의 범명을 주봉에 붙인 것은 그들을 질투한 후세 사람들의 장난기였을까.

소요산을 지나면 연천을 지나 연천과 철원의 경계인 신탄리역에 다다르면 열차는 더 이상 나가갈 수 없다. 과거 민통선이 이곳 신탄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탄리를 지나 철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철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미리 군부대에 신청을 한 뒤 신탄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안보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백마부대와 철의 삼각전적지·전망대·노동당사등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열차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철원역을 지나 평강으로 달려가는 게 순서지만, 철마는 더 이상 전진이 용납되지 않는다.

철원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된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 철원역을 건설할 당시만 해도 서울역과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자랑이 대단하다. 그러나 지금 가본 철원역은 과거 열차가 멈추면 사람들이 내리고 타던 플랫폼과, 여기가 철로였다는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안내판 없이는 이곳이 과거 위용을 자랑하던 철원역이라는 영광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때는 바쁘게 오르내렸을 철도 차단기만이 외로이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철원역에서 갈라지는 지선에 금강산 철도가 있다. 금강산 철도는 1921년

착공하여 1926년까지는 창도까지만 운행됐다. 철도를 부설한 주체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당시 일본이 창도에서 생산하는 풍부한 중석을 흥남의 제련소에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만든 산업철도였기 때문이다.

그 뒤 일제는 1926년부터 1931년까지 창도에서 내금강까지 50킬로미터에 이르는 철도를 연장 가설하고, 전기철도로 전환하여 해방 전까지 금강산 관광용 열차를 달리게 했다.

금강산 철도는 협궤열차로 하루 네 번 왕복운행을 했다. 철원에서 경원선과 갈라져 출발한 금강산 열차는 노동당사 옆 사요역 터를 지났는데, 철원대위리 검문소 앞에 가면 조그만 교각만 남아 '금강산 가는 철길'이라는 글자와 함께 지나가는 길손을 잡는다.

철길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한참을 다가가면 구 철원시가지까지 일자로 뻗은 논두렁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 논두렁이 금강산 가는 철길까지 차와 함께 온 금강산 철도다. 여기서 김화·창도·단발령을 넘어 내금강까지 80여 킬로미터를 나가면 금강산과 맞닿아 있지만, 이곳 금강산 철도는 해방과 함께 멈추어버려 80년이 지나도록 흔적만 애처롭게 남아 있다.

III. DMZ, 민족의 질곡을 품다

1. 울곡의 사상과 꿈이 서린 곳

화석정은 고려의 충신 길재가 살던 집터를 기려 울곡의 5대조인 이명신이 건립하고, 이숙함이 당나라 재상 이덕유의 별장인 평천장이 있던 화석(花石)에서 그 이름을 따다 지었다. 그 뒤 울곡이 증수한 것을 보면 두 가문의 인연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다.

흔히 화석정은 울곡이 퇴임 후 여생을 보낸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분이 말년을 보낸 곳은 황해도 해주의 고산면 석담이었다. 여덟 살 되던 해 울곡이 화석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시가 돌에 새겨 있다.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 한이 없어라.
먼 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잎 햇빛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 리 바람을 머금는다.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저녁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 소리.

임진강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낸 시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율곡은 이곳 화석정에서 임진왜란을 미리 예측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흔히 알려진 대로 선조에게 상소를 올려 10만 양병(養兵)을 주청한다.

지금 나라의 기세가 크게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나라가 무너지는 큰 화를 만나기가 쉬울 것이니, 10만 명의 병사를 기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러나 율곡은 이 무렵 동인들로부터 탄핵을 받고 사직하게 된다.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 북방의 전쟁터로 보냈는데, 군마가 너무 부족하여 말을 바치는 자에게는 군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을 때였다. 율곡에 대한 탄핵 내용은 이와 같은 일을 임금의 재가없이 함부로 시행했다는 것과, 그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입궐할 때에 누적된 피로로 승정원에 이르지 못하고 병조로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이 또한 권력을 잡아 교만해진 것이라는 게 그 요지였다.

박순과 성혼이 상소하여 율곡을 변호하자, 사헌부와 사간원 — 양사에서 합동으로 다시 탄핵했다. 이에 성균관 재학생 및 호남과 호서의 유생 800여 명이 그 부당함을 극력 상소하여, 결국 동인의 박근원 등이 유배되면서

그 일은 일단락됐다.

율곡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의 기초는 왕도정치·애민정치였다. 그는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할 수 없는 것은 왕도이며 인정”이라고 갈파하면서 “임금은 나라에 의거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거한다. 백관(百官)을 창설하고 여러 직책으로 가르친 것은 오직 민생을 위해서”라며 민본정치(民本政治)를 주창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하가 서로 믿는 성실이 없는 것과 신하들이 일을 책임지는 성실이 없는 것 등 7가지의 병폐를 언급하고, 봉건적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적극적 개혁을 주문한 것은 어쩌면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율곡은 이러한 폐단이 만연된 당시의 사회를 변법사상(變法思想)에 기초하여 개혁하고자 했다. 법의 개정애 반대하는 당시의 보수적 집권층과는 달리, 시대의 상황에 따른 법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다. 어떠한 제도라도 오래 지나면 폐단이 일어나게 마련이며, 조정의 법이라도 폐단이 생기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정치는 시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백성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율곡은 시대에 따라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창업·수성·경장의 단계로 나누어 논하면서, 당시의 사회를 경장기(更張期)로 진단한 명철한 정치인이자 탁월한 석학이었다.

율곡의 사회·정치적 견해를 짚어보며 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국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분은 집권통치자들이 태평성세만을 노래하면서 국방에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 당시의 형편을 통탄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국방론을 개진했다.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방안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것. 10만 양병설은 결국 이러한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세력이 매우 약하여 10년 이내에 국가에 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여 서울에 2만, 각 도에 1만 명씩 배치하되 군사에게는 호별세를 면해주고 무술을 단련시키며 6개월 만에 교대로 서울을 지키도록 한다.

변란이 일어날 때는 10만 명을 합쳐서 지키게 하는 등, 위급한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것이 양병론의 핵심이다. 율곡의 주장에 대하여 유성룡 같은 정치가는 “태평한 시대에 병사를 기르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10만 양병설이 제기된 뒤 8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맨 먼저 율곡의 뛰어난 식견과 예지에 감탄한 것도 그분이었다.

율곡 선생은 10만 양병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석정 기둥에 매일같이 기름을 칠해 두었다고 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 군대가 10여일 만에 서울로 입성하자, 선조와 문무백관은 그해 4월 29일 개성으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선조가 피난 가던 밤은 칙흑같이 어두웠고 비마져 퍼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화석정에 도착해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차마 임금을 모시고 도강을 할 여건이 아니었다.

이에 피주머니였던 백사 이항복 선생이 율곡이 사전에 준비해 놓던 것을 떠올리고 화석정에 불을 질러 임금의 피난길에 길잡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현재의 정자는 1966년 경기도 파주시 유림들이 다시 복원한 것이다. 1973년, 정부가 율곡 선생 및 신사임당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단청하고 주위를 정화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물의 정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花石亭’ 현판이 걸려 있다.

율곡이 지폐의 도안에 들어간 사연도 흥미롭다. 1972~1975년 사이에 있었던 화폐개혁 당시의 일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래, 가장 고액화폐인 1천 환권·1만 원권의 주인공

은 세종대왕이었다. 이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계속돼온 왕조 중심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1천 원권에는 퇴계 이황이 자리를 잡게 된다. 천원권에 퇴계 선생이 들어간 것은 중국 유학계에서도 ‘이부자(李夫子)’로 불릴 만큼 그분이 학문적 권위와 학식이 높다는 게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율곡 선생이 오천 원권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일설에 의하면 1971년과 1972년 남북회담 당시 북측의 대표가 마침 문산을 지나면서 남측 대표에게 “이곳에 율곡 선생의 무덤이 있냐”고 물어 봤다고 한다.

이에 남측 대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급히 확인해 보니 사실이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뒤 자운서원이 보수되고 율곡 선생과 신사임당의 복원사업이 실시됐다. 그리고 1972년 7월 1일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율곡 선생을 5천원 권 화폐에 처음으로 등장시켰다. 모든 것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이야기다.

2. 휴전선의 근·현대사 유적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다닌 곳은 철원이다. 1914년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가 놓이면서 강원도의 모습은 예전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철원의 운명이 바뀌면서, 열차도 사람도 더는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 되고 말았다. 서울역의 규모와 같이 만들었다는 철원역의 분주한 모습도 이제는 적막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더 이상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없다.

철원역이 지어진 것은 1914년. 경원선 철도와 함께 역도 만들어진 것이다. 철원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수많은 인파가 오가던 곳이다.

더구나 철원역에서 금강산 철도가 갈라지기 때문에, 철원은 자연스럽게 금강산 유람객들이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과 원산을 오가면서 부르던 「경원철도가」를 통해 철원이 얼마나 변화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여울의 철교를 열린 건너니
전곡리의 정거장도 등에 버렸고
연천대광 두 정거장 잠깐 거치니
철원색의 변화함이 눈을 흐리네.

이러한 철원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이제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객지에서 온 나그네에게도 무척이나 쓸쓸한 일이다. 이곳이 한때는 그렇게 번성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곤 역 주변에 조금 남아있는 철로와 사람들이 타고 내렸던 플랫폼, 그리고 기차역의 차단기뿐이다. 이곳 철로의 옆구리에 박힌 '1911'이란 제작년도가 시간과 함께 멈춰선 곳이 바로 철원역이다.

철원역을 지나 민통선 검문소를 빠져 나오면 커다란 광장이 나오고, 겨우 벽채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3층 건물이 있다. 이름으로는 많이 알려진 노동당사다. 해방 직후인 1948년에 건립하여 전쟁 때까지 사용됐다.

조선 노동당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성금으로 한 마을 당 쌀 200가마씩을 거뒀다고 안내판에 기록돼 있다. 내부 작업을 할 때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당원 이외에는 동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철원당사에서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류운형 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할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다. 1층은 민원이나 선전 등 실무를 주로 하던 사무실, 2층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간부의 사무실, 3층은 마루로 된 큰 강당으로 주민 교육과 모임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분단 탓일까. 아니면 세월의 간극에서 오는 기억력의 차이일까. 아무튼 그 참담한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노동당사는, 남겨진 이와 남겨 놓은 사

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굳이 따질 사안도 아니지만, 노동당사는 오늘도 그 작은 진실을 역사 속에 감춘 채 별판에 홀로 서있다.

노동당사를 뒤로하고 우측으로 가면 철원 제일감리교회가 나오고, 좌측으로 백마고지가 있다.

철원 제일감리교회는 1936년에 세워진 건물이다. 지상 3층인데, 그 당시 신도수가 5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 감리교 재단은 기독교 본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많은 비중을 주고 있는 종파였다. 감리교 재단이 서울에서 배재학당을 개교했듯이, 철원 남감리교회는 배영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민족지도자를 양성했다.

이곳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철원에서 3·1운동을 지도하였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해방 이후에는 이곳 철원 제일감리교회가 주축이 돼서, 1946년 서울에서 파견된 목사와 함께 서북청년단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공산주의자 색출에 앞장을 서기도 한다.

전쟁이 난 뒤에는 처지가 바뀌어서 철원감리교회는 옆에 있는 노동당사의 감시대상이 됐고, 교회는 교회대로 노동당사의 감시자 역할을 했다.

그곳에서 대마리로 방향을 틀면 백마고지가 나온다.

전쟁은 똑같은 곳을 두고 ‘편치볼’ ‘아이스크림 고지’ ‘아이언 트라이앵글’과 같은 다양한 이름을 만들어 냈다. 백마고지도 ‘White Horse’라고 미군들이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러 온 입장이라지만, 아무래도 주인과 객이 뒤바뀐 양상이다.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이름은 언뜻 들으면 달콤하고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 같겠지만, 실체는 전쟁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함축한 상징어다. 한국 전쟁 당시 무수한 포탄 사격으로 산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내려앉았다는 데서 유래한, 섬뜩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찰나에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 양구의 해안분지를 보며 화채그릇을 연

상하고, 편치불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래도 미군들은 그런대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어린 시절 아련한 고향에서 어머니가 정성으로 담아주던 편치불을 떠올리며 이국에서의 삭막한 외로움을 달랜 것일까.

‘아이언 트라이앵글’은 우리말로 ‘철의 삼각지대’란 뜻이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철원·김화·평강의 전선을 지칭한 용어다.

‘백마고지’란 이름은 효성산 언저리의 이름 없던 봉우리가 집중포격을 당해 수목이 다 쓰러져버리고 산모양이 변했는데, 그 처참한 형상이 마치 누워 있는 백마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전투에 참여했던 부연대장이 외신기자의 질문에 간단히 ‘화이트 호스 힐(White Horse Hill)’이라 대답한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거나 전쟁이 지형도 지명도 모두 바꿔 버린 것이다.

백마고지는 현재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백마고지와 마주선 언덕에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탑과 당시 전투상황을 기록한 기념관이 있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처절한 비극을 증언해주고 있다.

파주 임진강 가에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임진강 철교가 놓여있다. 임진강 철도는 경의선 공사와 함께 탄생했다.

1911년 경의선 철도가 열리며 개성과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던 이 철도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더구나 이 임진강 철도는 한반도의 굴곡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애잔하다.

해방과 더불어 남북을 잇는 동맥으로 더욱 더 힘차게 달려야 할 철마는 1948년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자 하루아침에 운행이 중단되면서 개성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2년 뒤 터진 한국전쟁은 임진강 철교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철도는 폭격으로 끊겼으며, 임진강 철교는 교각만 남은 채 선로는 완전히 파괴됐다. 휴전선이 3·8선보다 남으로 내려오면서 철도는 문산에서

멈춰서고, 임진강 철교는 더 이상 철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철도 역할을 못하게 된 임진강 철교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반공포로를 맞이하는 임시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로교환은 정전협정에서 3자가 가장 오래 줄다리기를 벌인 핵심안건. 포로의 규모와 포로의 성격 등 각기 다른 입장에서 협상을 해온 교전당사자들은 마침내 협정문에 사인을 하고 본격적인 포로 교환을 한다.

남측 포로는 판문점에 설치한 '환영 자유의 문으로'라는 간판을 통과하여 송환됐다. 그러나 포로송환의 주체는 한국이 아닌 유엔군이었다. 결국 우리 측 포로 인수는 이곳 임진강 철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끊어진 임진강 철교에 임시로 가교를 만들고 포로로 잡혔던 국군을 받아들였고, 남으로 오는 역전의 용사들은 이 다리를 건너면서 인민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벗고 속옷 바람으로 '자유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임시가교가 '자유의 다리'로 불리게 된 연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임시로 설치한 자유의 다리는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로 개통돼 사용되다가 1998년에 통일대교가 설치되자 그 임무를 마치게 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 뒤, 임진강 철교는 결국 반세기만에 다시 철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철도는 미완성이다.

임진강 철교에는 분명 상행선과 하행선이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두개의 철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현재 남북의 철도가 완공되었어도 이 철교의 한쪽은 여전히 파괴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민족의 분단과 함께 끊어진 아픔과, 오랜 시간 뒤 다시 이어진 희망의 씨앗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임진강 철교는 하루빨리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 아무도 찾지 않는 분단의 강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연천의 차탄천과 한탄강, 적성의 술탄천, 파주의 광탄천, 장단의 사천강과 만나 어우러지며 한강으로 흐르는 강이다. 구미리의 임진적벽,, 고랑포의 장단석벽, 동파리의 동파적벽 등 무수한 시인묵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던 절경의 강변절경들과 울곡의 화석정, 황희의 반구정 등 20여 개의 정자들이 임진강변에 몰려있었다. 이곳 들은 모두 군사지역으로 묶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그 많은 정자들은 전쟁으로 불타 없어졌다. 다만 화석정과 반구정만 후손들에 의해 복구되었으니 임진강의 비극은 바로 분단의 비극에 연유하고 있다.

8.15해방 전만해도 문산포와 고랑포까지 큰배가 왕래하며, 작은 배는 안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 한다. 따라서 임진강은 파주 연천에 온갖 물산들을 공급했으니 임진강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다. 유역 안에는 봉래호, 죽대저수지, 신당저수지, 감둔저수지, 난송저수지, 송도저수지 등 저수지가 많다. 상류는 전형적인 산지하천으로 강바닥의 경사가 심하고 연안에 충적지가 발달하지 못했으나 중,하류연안에는 임진강 하구평야 등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분포하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곳 임진강은 메기, 송어, 황복 등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고 자라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원과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일대에는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상당수 도래하며, 독수리와 기러기류도 많이 날아온다.

임진강 하구 고깃배들이 강을 타고 들어오면 고깃배를 반겨주며 길잡이를 하던 이들이 갈매들이었다. 조선조 최고의 청백리로 이름높은 황희정승이 정계를 떠나 은퇴하고 이곳 임진강 강가에 정자를 짓고 갈매기와 벗하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뜻으로 만든 정자가 반구정(伴鷗亭)이다. 앞에 흐르는 임진강의 탁트인 경치와 언덕을 배경으로 강가 해안에 자리잡은 반구정은 노 재상의 말년 휴식지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안식처이다. 어찌 황희뿐이라! 울곡도 이곳 임진강에 정자에서 자신의 학문을 탐구하며 임진강

과 벗삼아 세상의 시름을 물에 흘려보냈다. 그런 임진강이기에 남북으로 갈려 휴전선을 따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강이 돼 버린 임진강이 더욱 그렇다.

이곳 반구정 누각에 오르면 임진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깃배는 볼 수 없고 외로이 나는 기러기만이 그 옛날 임진강의 화려했던 영화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곳 파주 임진강은 예로부터 참계가 유명하다. 그래서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으로 '파주계'가 손꼽혔는데 이곳 반구정 앞은 서해바다가 밀물때면 바닷물이 올라오는 갯벌로 유명했다. 따라서 참계를 좋아하는 갈매기가 이곳까지 오는 것은 다연지사이고 이러한 자연의 모습은 황희정승의 답답한 한양생활의 갈증을 식혔을 것이다.

임진강의 슬픔은 비단 남쪽만의 슬픔이 아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반쪽 북쪽도 임진강이 분단을 상징하는 비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57년 북한의 문학가 박세연이 가사를 쓰고 고종환이 곡을 써 1957년 북한에서 처음 불려진 노래 '임진강'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한을 끌어안고 흐르는 임진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외로이 흐르는 강 어둠에 잠긴 강
피어린 아픔 안고서 꿈틀대는 강

시퍼런 너의 물결은 민족의 원한이런가
잘려진 산하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강
아, 분단의 강 붉게 타는 임진강

조국을 하나로 이어 이으며 굽이쳐 흘러가네
아 해방의 그날을 맞이할 민족의 물줄기여
아, 통일의 강이여

4. 고향에 심어진 지뢰

과주군 파평명은 파평 윤씨의 선조가 난 고장으로 유명하다. 이 곳 파평 면에는 장파리와 금파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전쟁 전 임진강 너머 장단 면에 살다가 전쟁이 끝나면 들어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 후 이 지역은 민통선으로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또한 이곳에 미군부대가 훈련장을 만들면서 다른 지역은 민통선 안이라도 고향인 사람에게 개방을 하였지만 이들에게는 개방이 되지 못했다.

고향인 강 건너편 지역을 바라보며 이들은 농한기 때는 민통선 안 미군부대로 들어가 시야를 가리는 풀과 나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 생계를 이어간다. 이들이 들어간 미군부대 근처는 대부분 지뢰밭이었고 이들에게 마초작업은 지뢰피해는 필연이었다.

당시 미군은 임진강을 건너는 리비교를 넘어 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각서를 쓰고 이들에게 마초작업을 시켰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고가 나면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 또한 지뢰사고가 나면 마을전체가 일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뢰사고를 당했다는 말도 함부로 못했다.

장파리가 고향인 이용남씨는 “이 지역에서 난 지뢰사고는 대부분 자신들이 심은 지뢰에 의한 사고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지역에서 지뢰를 뿌리게 된 동기는 미군부대의 명령에 의해 주민들이 들어가 심었고 지뢰지도를 작성했다”며 “지뢰를 심는 것도 생계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 다시 일을 할 때 미군부대에서는 당시에 심었던 지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지뢰가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1997년 대인지뢰 금지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탄 조디 윌리엄즈가 이곳 장파리에 방문했다. 그는 지뢰 피해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의족을 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엔 기자들만 있을 뿐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제는 대인지뢰 피해자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뢰피해는 쉽게 얘기 못할 아픔이었다. 지금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정부와 시민단체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뢰 퇴치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고향땅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리는 작업인 것이다.

5. 민통선 사람들

과주시 장단면 군내리에 위치한 통일촌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민통선안에 자리잡아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휴전 후 아무도 살지 않은 이곳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 74공동선언 이후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에 키부츠형 전락촌을 형성하라는 명령을 하고 지원자를 선발했다. 지원자들 중에서 이 지역 출신 재대군인 40세대와 민간인 40세대를 뽑아 입주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세대당 토지불하를 넉넉히 받은 데가 각종 세제혜택, 농번기 군인들의 일손지원 등으로 다른 농촌마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 통일촌 역시 지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논둑 넘어 산은 엄연히 지뢰밭 구역이다. 산사태나 홍수 뒤에는 논에서 일하고 논두렁을 걷다가도 지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더구나 땅에 대한 원주인들이 하나둘 생기고 2000년대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민통선 안 통일촌에 부동산 소개소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정부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면서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민통선 안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마을의 관광 수입을 높이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서울 등지에서 투기와 별장을 염두 해두고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다. 이 마을은 생기면서부터 도둑이 없고 인심이 좋은 마을이어서 집에 대문이 없는 마을로 유명하다. 언제부터인가 외지인들이 점차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문이 만들어진 집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문이 생긴 집들은 문만 굳게 닫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희안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 이 집들은 외지인들이 별장 개념으로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통일촌은 파주 장단콩과 함께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여름이면 통일촌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파주지역의 여러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DMZ 생태학교'를 진행해오고 있어 도시의 아이들에게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 DMZ 안 자유의 마을

휴전선 250킬로미터에서 유일하게 DMZ, 즉 비무장지대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을이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뜻은 남한에서 볼 때 유일하다는 것이다. 남북을 합치면 대성동과 북쪽의 기정동 마을 두 군데가 비무장지대 안에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남북을 잇는 도로가 1번국도와 함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신1번국도가 생겨 대부분 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1번국도를 이용하지만 이 도로가 생기기 전만해도 남북을 이어주는 길은 1번국도 밖에 없었다. 이 1번국도를 타고 북에 들어가거나 판문점을 가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마주치게 하는 곳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허허벌판인 판문점이 회담장소로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담에 참여하는 쌍방의 기밀유지였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속에서도 유엔군은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았다.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에서는 '정전협정 이전에 비무장지대 내 거주자는 계속 입주를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북한은 기정동을 관할하게 됐고, 유엔사는 대성동을 관할하게 됐다. 대성동과 관한 규정은 유엔사사령관의 관할에 따라 좌우된다. 시집을 오는 경우에만 이 마을에 주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유엔군사령관의 소관사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땅은 자기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할은 유엔사를 대표해 미군사령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통선 지역 마을들이 한국정부 관할에 있는 것과는 엄밀히 차이가 있다. 이 지역 농민

들에게는 땅에 대한 경작권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다. 또한 밤에는 11시면 통금이 되며 모든 행정치안업무는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유엔사 마을인 대성동에는 당연히 유엔사의 오성기가 걸려있어야 하지만 지금 대성동에는 태극기가 걸려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다. 7월 27일은 남쪽에서는 '정전협정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승전기념일'이다. 북으로서는 세계최강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전쟁을 치뤘고 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미국으로서도 이 전쟁은 그동안 미국이 참여한 전쟁중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정전협정은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상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맺어진 조약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이곳에 유엔기를 설치하는 것에 미국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기 대신 태극기가 오라갔다.

이에 반해 북한은 자신들의 상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미국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재정과 불편을 감소하면서 160미터의 대형 인공기를 기정도에 달게 했다. 반대로 대성동에는 이보다 낮은 100미터의 깃발이 설치돼 있는데 이 두개의 깃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깃발과 두 번째로 높은 깃발이 됐다.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_____
연락처(집)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연락처(직장)	주소 _____ 직장명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물받을곳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평화심성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 <input type="checkbox"/> 스터디모임 <input type="checkbox"/> 평화축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0 년 월 일	